

연구총서 99-2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신 상 진
김 국 신
김 영 춘
여 인 곤

통 일 연 구 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남북한간 대립뿐만 아니라 국제환경 요인에 의해서 형성·심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을 남북한관계 차원과 동북아지역 차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남북한 및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4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 북한 변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한반도 군비통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의 협력유도방안을 제시하였다.

1.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남북한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차원의 중층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의 정치·경제·문화적 이질성과 상호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정책으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구조가 심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냉전적 대립구조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차원의 냉전구조 하에서 더욱 복잡하게 얽히면서 고착화되었다.

남북한은 1970년대 초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합의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남북한간에는 여전히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지속시키고 있는 주변환경 요인들을 동북아

지역국간의 양자관계 및 다자관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양자관계로서는 미·중관계를 비롯하여 미·북 및 일·북관계 등을 들 수 있고, 다자적 요인들로서는 북한과 중국·러시아간의 신 북방3각관계, 한·미·일 동맹체제 그리고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의 부재 등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심화는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북한의 대외고립은 북한의 대외정책을 강경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체와 중국·북한·러시아 사이의 느슨한 안보협력관계도 한반도 냉전구조의 외피(外皮)로 작용하고 있다.

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5월 5일 CNN과의 회견을 통해 ① 남북한 적대관계 해소, ②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정상화, ③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 ④ 한반도에서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군비통제, 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동북아지역의 안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동북아 6자회담 등 다자안보협력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문제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남북간의 폭넓은 대화를 위해서는 남한의 자주화, 콘크리트 장벽과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외세와의 공조파기 등의 선행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중대한 이유중의 하나가 남북한간 비대칭적인 대외관계에 기인한다면서 대미·일 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평양주재 미국 대표부 개설시 예상되는 체제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대사급 외교관계 개설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이 2000년 초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일·북 국교 정상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셋째,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와 미군철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 군사동맹관계와 주한 미군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있고 자신의 핵 위협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미사일이 자주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체제안보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와 관련, 북한은 미·북간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고 미군이 남한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동북아의 현 실정이 1975년 헬싱키선언 당시 유럽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6자회담 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대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가. 미국

1994년 10월 미·북 핵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미국은 개입·확대전략에 입각하여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려 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 의원 및 보수세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핵동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무부 인사들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북한이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동결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KEDO에 참여하여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1995년 1월 여행, 언론취재와 통신, 금융거래, 특정품목에 대한 교역 허용, 원자력분야 사업 등 4개 부문에 걸쳐 제1단계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관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4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4자회담을 통해 남북간 화해와 신뢰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4자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는 회담의 효율성만 저하시킨다는 생각에서 남북한과 주변4국이 포

합된 6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남북한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가면 4자회담과는 별개로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나. 중국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한반도에 대한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국면이 완화되고, 북한의 대미·일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주변국보다 한반도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고립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지속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한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북, 일·북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 및 자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발사 저지를 위해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를 가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경제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다면 중국의 부담이 줄어들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 주

변정세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개방을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에게 개혁·개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4자회담을 통해 남북한 및 미·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기를 바라면서 동 회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4자회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4자회담의 성공적 진행이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일본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기조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및 영향력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과의 기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 정책은 북·일수교 교섭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의 초당파 의원들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북·일간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9년 12월 일본은 북한과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2000년 수교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북한과 일본간의 대화 재개는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경색된 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수교교섭이 재개된다고 하여 북·일관계가 바로 정상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인 납치의혹사건과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 전후 보상문제 등 넘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

보장도 큰 걸림돌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일본은 북한도 핵시설에 대하여 국제원자력 기구의 핵사찰을 받고 남북 상호 핵사찰을 수용함으로써 한반도가 비핵지대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일본의 대북경협과 관련, 일본은 남북한간 교류협력 확대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자국의 대북한 투자확대 등 대북한 경제진출 기회를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와 관련, 일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보장노력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한반도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구상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라. 러시아

러시아는 남북한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대미·일관계가 개선되어야 북한의 정책변화가 가능하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면서 미·북, 일·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개혁 실패를 교훈삼아 큰 폭의 정치·경제 개혁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스스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이 핵개발 의도를 완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주변국들에게 안보위협을 제기하고 동북아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군비통제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전협정이 냉전시대의 잔재이지만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4자회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소극적이며, 다자간 국제회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4. 주변4국 협력유도 정책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주변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가 동북아정세 안정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정전협정 서명국이면서 동북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이후 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통일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우호적이고 동북아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킴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미·일·중·러의 지지를 유도하기가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를 유도해 내야 한다. 북한은 막대한 재원을 군사비로 지출함으로써 내부 경제파탄을 심화시키고 있고,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 북한의 내부요인이 북한으로 하여금 재래식 군사력 증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정책을 지속하도록 하는 근본적 이유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인식도 북한의 군사정책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한·미동맹관계를 탈냉전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조정하고, 북한과 중·러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주변국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제고립을 완화시켜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미·일 관계개선 이후 북한은 폐쇄적 경제체제를 고수하기보다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국제고립에서 해소된다면,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도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되어 남북대화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

한반도 내부 및 주변상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화해 협력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남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바, 한국이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동북아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대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자안보협력대화를 통한 협력안보는 동맹을 통한 안보노력을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간 신뢰를 쌓아 분쟁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분쟁 예방을 위한 대화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지역국간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면, 이는 한반도의 냉전적 대립을 해소하는 데 건설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3
II.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남북한의 입장	4
1. 냉전구조의 현황	4
가. 남북한관계 차원	4
나. 동북아지역 차원	6
2.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19
가. 한국의 입장	19
나. 북한의 입장	26
III.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41
1. 미국	41
가.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기조	41
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미국의 입장	43
2. 중국	55
가. 중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기조	55
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	63
3. 일본	79
가. 일본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기조	79

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일본의 입장	85
4. 러시아	102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기초	102
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110
IV.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주변국 협력유도 방안	139
1. 기본방향	139
2. 주변4국 협력유도 정책	144
가. 대미정책	144
나. 대중정책	147
다. 대일정책	152
라. 대러시아정책	155
V. 결론	160
참고문헌	164

I. 서론

1. 연구목적

한반도에서 냉전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1945년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자마자 38도선 이북지역에 소련군대가 진주하고 38도선 이남지역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군정을 시작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간에 국익확보를 위한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48년 38도선 양측지역에 남북한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남북한간에 냉전적 대립구도가 조성되게 되었다.

남북한간 대립은 1950년 북한의 남침과 미·중을 비롯한 주변국의 한국전 개입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복잡하게 전개되게 되었다. 한국전에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소련이 개입함으로써 동·서 양진영간의 냉전구조는 견고하게 정형화되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대립과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한반도는 미·소를 주축으로 한 동·서 진영간 냉전적 대립의 최일선 격전장이 되었다.

그런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단순히 남북한 사이의 이념적 대립에 의해서만 심화되었다기보다는 전세계적 차원의 동·서 냉전과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냉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첨예화되었다. 남북한이 각기 미국과 중·러와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여 대립함으로써 한반도는 자연히 동·서 진영간 대립구도에 편입되게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미·소, 미·중간 대립과 맞물려 형성되고 고착화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맥락을 함께 하면

서 전개되었다. 요컨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격화시키는 데 있어 주변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동유럽국가들이 붕괴되고 1991년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는 와해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하였던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여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1세기 진입을 목전에 둔 지금 국가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있고, 이념적 유사성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해체됨으로써 1990년대 초 한반도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무실화하는 한편, 과거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관성 있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다.¹⁾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대 경쟁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4자회담 이외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소한도의 메카니즘마저도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총체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북한과 주변 4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관련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

1) 물론 중국과 대만도 분단되어 있지만, 양측간에는 이미 1987년부터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연간 200만 달러가 넘는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는 이념적 대립보다는 대만의 '대만화'와 대만문제의 '국제화' 추세로 인한 갈등이 더 심각하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신상진, "대만문제와 중·미관계: 동아시아에서 패권확보를 위한 대립,"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pp. 263~287 참조.

력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특징을 국제환경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을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주변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주변국의 협력유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5월 미국 CNN 방송과 프랑스 르몽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을 제시하였는 바, 향후 한국의 냉전구조 해체노력은 기본적으로 이 구상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① 남북관계 개선, ② 북·미, 북·일관계 개선, ③ 북한의 변화 유도, ④ 한반도 군비통제 및 ⑤ 평화체제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상기 5개 과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분석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주변4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아울러 상기 5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4국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분석을 위해 주변4국에서 발간되는 정부 공식문서, 권위 있는 학술지 및 각종 언론 보도문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을 보다 본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변4국 정책입안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자 및 관리들과의 면담내용을 활용하고자 한다.

II.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남북한의 입장

1. 냉전구조의 현황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남북한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차원의 중층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의 정치·경제·문화적 이질성과 상호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정책으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구조가 심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냉전적 대립구조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차원의 냉전구조 하에서 더욱 복잡하게 얽히면서 고착화되었다.

가. 남북한관계 차원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의 남북한관계는 전쟁상태가 협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준전쟁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으며, 한국도 '북진통일론'과 '북한흡수통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였던 측면이 있었다. 즉, 남북한은 1950년대에 형성되었던 냉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 전세계적 차원에서는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의 격전장으로 남아 있다. 더욱이 1994년 이래 북한이 정전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대표단을 철수하는 한편, 중국의 군정위 대표단과 폴란드의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를 소환·철수시켰다. 북한이 정전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반도에서 정전 약속이 파

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한관계가 전쟁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아가 북한이 1999년 서해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한국측 영해를 침범하여 남북한 해군함정간에 교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대내경제 침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군사력 증강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북한은 116만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즉각 전투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병력도 70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 1998년 현재 북한은 4,000여대의 전차, 2,000여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고, 440대의 수상전투함파 40여척의 잠수함 그리고 85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언제든 핵탄두를 조립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미국 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처럼 과도할 만큼의 군사력 증강정책으로 인하여 북한경제는 극도로 피폐한 상태에 있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와 평화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수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대남 체제전복을 기도해 왔고, 한국도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체제를 현대화하는 등 군비증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로써 남북한간에는 군사적 불신이 축적되게 되었고, 냉전체제는 더욱 결정화(結晶化)하였던 것이다.

남북한은 정치·이념적 측면에서도 구조적 긴장관계를 보여 왔다. 북한은 정권수립 직후부터 북한내 정파들을 반동이라는 구실을 붙여 숙청하였으며, 각종 경로를 통하여 한국정부를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

2) 국방부, 「'98 국방백서」, p. 213.

‘꼭두각시’ 또는 반민족주의 정권이라고 비난하여 왔다. 과거 한국 역시 북한 정권을 한국전을 일으켜 수많은 민족의 생명을 희생시킨 장본인이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송두리째로 유린하고 있는 비민주적 집단으로 공격하는 것을 서슴치 않아 왔다.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서신교환 및 정보교류를 봉쇄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존속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 사이에는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이 드리워져 있는 바, 남북 이산가족간 생사확인과 최소한도의 접촉과 교류마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중반 남북한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북한이 남북한 이산가족 교환방문으로 인하여 북한주민과 북한체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998년과 1999년 북경에서 남북 차관급회담이 개최되었을 때에도 한국정부는 대북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연계하고자 하였지만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요컨대, 남북한은 1970년대 초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도모해 나가자고 합의하였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 및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등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합의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남북한간에는 여전히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나. 동북아지역 차원

동북아에 대한 개념정의가 학자들간에 명확하지는 않지만,³⁾ 한반

3) 동북아지역에 대만과 몽골까지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는가 하면, 동북아 지역을 남북한과 중국·일본·러시아로 한정시키는 학자도 있다.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동북아문제를 논의하면서 미국을 핵심 행위자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도가 동북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반도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세력 사이의 세력각축장이 되어 왔다.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고 해방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되는 한편, 남북한간 냉전적 대립이 심화된 것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한반도문제는 국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제환경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지속시키고 있는 주변환경적 요인들을 동북아 지역국간의 양자관계 및 다자관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양자관계로서는 미·중관계를 비롯하여 미·북 및 일·북관계 등을 들 수 있고, 다자적 요인들로서는 북한과 중국·러시아간의 신북방 3각관계, 한·미·일 동맹체제 그리고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의 부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 양자관계 차원

(가) 미·중관계

소련이 붕괴하기 이전까지 세계질서는 미·소간의 관계여하에 의해서 좌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의 그림자도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간의 각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붕괴 이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질서의 큰 그림은 유일 패권국인 미국과 새로운 지역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간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서, 미·중관계의 변화는 한반도의 냉전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냉전 이후 미·중관계는 지역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대만문제, 중국내 인권문제,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수출의혹 및 무역마찰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보이면서 전개되어 왔다. 물론 지역안보 유지와 경제 협력 필요성으로 인하여 양국은 갈등 속에서도 '건설적 전략동반자관계' 구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⁴⁾

소련붕괴로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은 냉전시대처럼 중국에 대해 우호정책을 전개하기보다 견제정책을 취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1991년 대만에 대해 F-16 전투기 판매를 결정하고, 1994년에는 대만과의 관계격상정책을 채택하였으며, 1995년과 1996년에는 대만해협 인근에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여 대만문제에 깊숙히 개입하였다.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중국의 분열과 약화를 목적으로 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간주해 왔다.⁵⁾

1998년 6월 클린턴의 중국방문시 대만문제에 대한 '3불정책'을 밝힘으로써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오해의 소지는 상당부분 완화되었다.⁶⁾ 그러나 미국이 1979년 자국 국내법으로 제정한 '대만관계법'

4) '동반자관계'라는 개념은 1994년 이래 중국에 의해서 고안되어 현재는 중국이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맹관계'가 냉전시대의 외교관계의 형태라고 비난하면서, '동반자관계'라는 용어를 탈냉전시대의 외교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동반자관계'의 개념 속에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동반자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탈냉전시대의 진일보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閻學通 等, 「中國與亞太安全: 冷戰後亞太國家的安全戰略走向」, (北京: 時事出版社, 1999), pp. 12~14, 18~45; 중·미가 '건설적 전략동반자관계' 구축을 합의한 공동성명문은 「人民日報」, 1997. 10. 31 참조.

5) 대표적인 글로서는 宋強, 張藏藏, 喬邊 等, 「中國可以說不」, (北京: 中國工商聯合出版社, 1996); 孫洛勤, 崔洪建 主編, 「牽制中國: 神話與現實」, (北京: 中國言實出版社, 1996) 등이 있다.

에 의거하여 대만의 안보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중국도 대만문제를 국가주권문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미·중간의 대립은 중국내 인권문제와 중국의 미사일기술 수출 의혹을 둘러싸고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의 인권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하여 중국에 대해 국제적 압력을 가하고자 하였으며,⁷⁾ 미 국무부가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 중국내 인권상황을 거론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티벳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접촉하고 국무부내에 티벳담당 조정관을 설치하여 티벳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권탄압과 종교박해를 문제삼고 있다.⁸⁾ 중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 중국 내정간섭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국으로서는 개인의 자유권보다 생존권과 발전권이 더 절박한 문제라는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중국의 미사일·핵기술 수출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중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 지역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미사일 부품·기술을 판매하고 심지어는 핵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을 지역안정 위협국가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미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 수출을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1999년에 들

6) 클린턴이 중국 상하이에서 언급한 대만문제에 대한 '3불정책'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주장을 반대한다, 대만이 주권국가 자격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人民日報』, 1998. 7. 3.

7) 미국은 1990년부터 출근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 중국인권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중국과 일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대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였다.

8) 任言實, "美國人權紀錄," 『人民日報』, 1999. 3. 2.

어서는 미국 의회에서 ‘콕스보고서’를 발간하여 중국이 미국에서 군사 기술을 불법적으로 절취하여 북한을 비롯한 ‘문제국가’들에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핵무기 기술을 유출하였다고 비난한 바 있다.⁹⁾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주장이 하등의 근거가 없는 날조라고 반박해 왔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대량살상무기를 주변국에게 수출하고 있는 나라로 공격하는 목적이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결코 군사기술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스스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성자탄 등 첨단 군사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콕스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1999년 8월 중국이 사거리 8000km의 ‘동평31’ 미사일을 실험발사한 것도 중국이 자체 기술로 충분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이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움직임으로 인하여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이는 중국의 미사일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미국의 구상이 중국경제 의도하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⁰⁾

더욱이 1999년 5월 유고주재 중국대사관이 미국을 위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의해서 포격을 받게 되자, 미·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각종 대화채널을 중단하였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중국은

9) 콕스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美炮制考克斯報告是煽動反華情緒破壞中美關係的一出劇,” 「新華通迅」, 1999. 5. 31 참조.

10) 朱成虎, “美國戰區導彈防禦計劃意欲何爲,” 「瞭望」, 1999年 第7~8期 (1999. 2. 15), pp. 38~39.

유고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습과 타국에 대한 미국의 내정 간섭을 국가주권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신간섭주의’적 행동이라고 비난하였다.¹¹⁾ 최근에는 미·중간의 갈등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 포용정책과 미·중간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협상 타결로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중국이 미국과 소련붕괴 이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새로운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대립구도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간에 전개되고 있는 갈등은 한반도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중국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바라기 때문에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지하고는 있으나,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자국의 안보이익에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더 명백하게 표출되고 있다.

1994년 10월 미·북간에 제네바 핵기본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당시 미국의 국방차관보였던 찰스 프리먼의 방중으로 미·중간 군사대화가 재개되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1996년 4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제의한 4자회담이 오랜 기간 동안 개최되지 않고 지연되었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미·중관계가 대만해협 사태로 인하여 긴장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¹²⁾ 미·중간 긴장상태 지속으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긴장

11) ‘신간섭주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잘 나타난 글은 徐學銀, 朱憲, “評新干涉主義,” 「現代國際關係」, 1999年 第8期 (1999. 8), pp. 19~22; 蔣建清, “北約二十一世紀新戰略及其影響,” 「國際問題研究」, 1999年 第3期 (1999. 7), pp. 15~19를 참조.

1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19~27 참조.

완화를 위한 구상에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나) 미·북관계

북한이 한국과 미·일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 때문이다.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미·북간 적대관계의 지속이 북한의 정책변화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북한이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강조해 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미·북관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발사, 한·미동맹관계 지속,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지정 등으로 인하여 적대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고,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대북 군사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한반도의 갈등구조가 첨예화하였다. 다행히도 1994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해결 의지를 밝힘으로써 미·북 협상이 시작되었고,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과 '핵확산금지조약' 잔류 약속을 이끌어 내는 대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과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북한에 2기의 경수로를 건설해 주고,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과연 미국과의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 60만톤

의 식량제공 대가로 금창리 의혹시설에 대한 미국의 현장접근이 허용됨으로써 금창리 의혹시설 문제가 규명되었지만,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과 북한 인권문제 등으로 인하여 1999년 상반기까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 미·북관계 개선에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1998년 8월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였는데, 이는 미국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이미 개발·은닉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하여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미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전역미사일방어체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고, 북한에게는 직접 강은 양면전략을 통해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였다.

북한 미사일문제가 미·북간 베를린 회담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보한다는 선에서 일단락됨으로써 미·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보 약속을 받아내는 대신에 북한에게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적성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기로 하였다.¹³⁾ 더욱이 1999년 9월 12일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미 의회에 대북정책 권고안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¹⁴⁾ 향후 북한이 미사일과 핵개발을 중단한다면 미·북관계 정상화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미·북간 합의와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 천명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긍정적인 요인

13) 미·북 베를린회담 언론발표문은 「동아일보」, 1999. 9. 13 참조.

14) 페리보고서에 대해서는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www.state.gov/regions/eap/991012-northkorea-rpt.html 참조.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과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미·북관계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와의 동맹조약이 ‘친선 선린 및 협조조약’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한·미간에 동맹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¹⁵⁾ 따라서 북한은 한·미동맹관계 이간을 위해 ‘통미봉남’ 또는 ‘선미후남’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일·북관계

과거 일·북관계는 세계적·지역적 냉전체제의 틀 속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전개되어 왔다. 냉전시기 일·북간에는 갈등과 반목이 연속되었고, 관계개선에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

탈냉전기에 접어들어서도 일·북간에 관계개선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양국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갈등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는 없었다. 1991년부터 8차에 걸친 수교교섭이 있었으나, 미·북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수교교섭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은혜문제’와 북한 핵문제가 제기됨으로써 8차 수교회담이 결렬되었고, 이후 일·북관계는 소강국면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사건 발생으로 남북한관계가 경색되자, 일·북관계도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일·북간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던 과장급 접촉이 중단되어 일·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아울러 과거청산을 위한 배상금 지불문제, 일본인 납치사건, 각성제 밀

15) 러시아와 북한간의 ‘친선 선린 및 협조조약’은 이미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한방문시 서명되었다. 그러나 조약의 정확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수 의혹사건 등으로 인하여 일·북관계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더욱이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는 일본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을 제기하였고, 이는 일본내 보수우익의 목소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9월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연구하기로 합의하였고, 1999년 5월 '주변사태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 등 미·일 신안보협력지침 관련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화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대한 10억 달러의 자금지원 동결, 조총련의 대북한 송금 중단, 식량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¹⁶⁾

1999년 12월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의 북한방문을 계기로 일·북 적십자회담과 국장급 수교교섭 예비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후 북한에 대해 취하였던 제재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일·북간 수교교섭이 재개되어, 일·북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게 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미·북관계에 급속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북관계에 큰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일·북관계가 정상화될지는 의문이다.

일·북관계는 미·북관계와 남북한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제력과 향후 이 지역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북관계 진전 없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북한간 관계가 개선될 수 있

16) 배정호, "북·일관계의 변천과 북·일수교 전망," 통일연구원 제30차 국내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1999. 8. 11, pp. 27~28 참조.

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2) 다자관계 차원

(가) 한·미·일 협력체제와 중·북·러 3각관계

전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의 해체와 한·러, 한·중관계 정상화로 과거 한반도에서 지속되었던 한·미·일 대 중·북·러 간의 대립구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특히 북방 3각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소련해체로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을 갖을 수 없게 되었고, 한·중수교 이후 중·북한간 동맹관계에 균열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의 '조·소우호 협력 상호원조조약' 중 자동개입조항을 개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친선 선린 및 협조조약'을 서명한 상태에 있고, 중국도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자동적으로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러시아가 소련해체 직후 과도한 한국경사 정책에 따른 불이익을 거울삼아 북한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1999년 여름으로 예정되었던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이 2000년 2월 성사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간에 어느 정도의 관계복원이 예상된다.

1999년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미국 주도하에 유고주제 중국대사관을 폭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북한·러시아 3국간에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통해 한·중수교 이후

단절되었던 북한 최고위층 지도자의 중국방문이 성사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최고 지도자간 핫라인 전화통화 설치와 특사교환을 통해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입장을 확인하였다.¹⁷⁾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로 북한과 러시아간 관계복원 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양국 지도부간의 상호 불신 및 중국의 '두 개 한국정책'으로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냉전시대와 같은 긴밀한 '혈맹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방 3각관계가 복원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북한·러시아 3국이 협력관계를 강화하게 된다면, 이는 한·미·일 3각관계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동안 중국과 북한이 한·미·일 3국 협력체제를 자신에 대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해 왔던 만큼, 한·미·일 3국관계 강화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간 갈등을 기축으로 하여 조성될 수 있는 중·북·러와 한·미·일 사이의 대립구도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나)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미비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 4국 모두가 한

17)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중국방문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가 다극화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로 인하여 세계질서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人民日報」, 1999. 6. 5;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고주재 중국대사관을 폭격한 후 중·러관계 강화추세에 대해서는 「人民日報」, 1999. 5. 11~12, 6. 13 참조.

반도에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문제는 곧바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직결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의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유럽지역에서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럽연합」(EU)과 같은 다양한 다자 지역협력기구가 존재함으로써 역내 안보문제에 대처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유럽안보협력회의는 유럽지역내 안보적 갈등을 미연에 완화·예방하고 독일의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동북아에는 국가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동북아에서는 1994년부터 북한을 제외한 역내국가들의 민간학자와 정부관료가 함께 참여하여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개최하고 있을 따름이다.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지역포럼」(ARF)과 같은 다자간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반도문제를 중점 논의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¹⁸⁾ 현재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NEACD도 정부차원의 협의기구가 아니며, 아무런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다양성과 광범성뿐만 아니라 일부 역내국가들의 미온적인 자세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너무도 광범위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역내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지역질서를 기본적으로 양자간 동맹관계를 통해 유지하고자 하고 있고, 중국도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

18) 박태환, 「국제정치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서울: 서울프레스, 1999), pp. 26~28.

다.¹⁹⁾ 물론 북한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가 창설되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²⁰⁾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논의를 위해 6차에 걸쳐 4자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함으로써 특기할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자회담은 남북한과 미·중의 전원일치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다자안보대화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의 미온적인 자세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2.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가. 한국의 입장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한국정부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김영삼 '문민정부'는 “미·북관계 발전이 남북관계 진전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광복절 행사의 공동개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국자 회담의 개최를 제의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과 기업인의 방북 등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북간 기본합의와 남북대화 재개는 별개

19) 중국이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주요 이유는 대만문제와 중국내 인권문제 및 남사군도 영유권문제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역내 다자안보협력체가 미국 등 특정국에 주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신상진, “중국: 국력에 기반한 다자안보협력 참여,” 한겨레신문사 편, 「새천년, 새세기를 말한다, 1」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9), pp. 239~245 참조.

20) 여인곤 외,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99~102.

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면서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경수로 사업, 남북교역 및 시범적 경험, 인도적 지원 문제 등 당국간 직접대화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만 남한과의 관계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지하였다. 특히 북한은 정전체제의 무실화 기도와 1996년 9월 잠수함의 강릉 침투사건, 1997년 7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침투사건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북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신 정부는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통일 배제, ③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①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②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③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 ④ 북한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의 탄력적 제공, 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⑥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을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다.²¹⁾

이러한 대북정책 목표와 3대 원칙이 설정되고 추진방향이 채택된 것은 국민의 정부의 대북한 시각이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문민정부는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하면서 의외로 북한의 붕괴가 빨리 올지 모른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시각은 북한체제는 실패한 체제이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북한의 붕괴를 촉진할 내외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

21)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1998).

한의 변화는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할 때까지는 대남혁명전략과 군사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²²⁾

상기와 같은 대북인식 하에 국민의 정부는 한편으로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추구하는 포용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게 되었다.²³⁾ 또한 한국은 “남북대화과 4자회담을 병행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남북 직접대화에서는 남북화해, 교류·협력 문제를,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1997년 12월부터 개척되고 있는 4자 본회담에 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당국간 직접대화를 회피·거부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 실익만을 취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8년 6월 강릉 앞바다에 대남 잠수정 침투, 8월 미사일 시험발사,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²⁴⁾ 등을 통해 남한 및 동북아 지역 안보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이 1998년 12월 17일 전격 단행한 대이라크 공습 이후 일부 해외언론들은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을 둘러싼 미·북간 대립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습 가능성도 시사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대응조치, 보복조치가 가능하다는 성명들을 연속 발표함으로써

22) 통일부,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서울: 오성사, 1999), pp. 5~7.

23) 위의 책, pp. 9~11.

24) 임동원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999년 2월 11일 경실련에서 행한 대북정책 강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하려는 것은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미·일에 대한 협상카드, 외화 획득, 대외적으로 힘의 과시 등 세 가지 목적에 있다”고 밝혔다.

써 제2의 ‘한반도 위기설’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문제가 현안 해결만이 아니라 근본문제 해결을 병행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근본문제란 현안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말하며, 이의 해체는 남북한과 한반도 관련당사국들의 상호위협 감소와 호혜관계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²⁵⁾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핵, 미사일, 남북대화 등 모든 대북현안과 미·북 수교 등 북한의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일괄타결함으로써 한반도의 50년 냉전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1999년 1월 14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한반도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천명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2월 11일 일본 도쿄신문과의 인터뷰 및 고무라 일본 외무장관의 청와대 예방, 3월 20일 오부치 일본총리와의 서울 정상회담, 5월 5일 CNN과의 위성중계 회견, 5월 6일 르몽드 프랑스 신문과의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일괄타결 구상을 피력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²⁶⁾

-
- 25) 길정우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논의를 촉발한 문제들을 ① 북한의 변화 가능성, ② 대북 사안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 인식, ③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영역 확보 노력, ④ 남북관계에서의 돌파구 마련과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대한 관심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길정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I) -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 (통일연구원 창립 8주년 기념 제29차 국내학술회의 발표 논문, 1999. 2. 26), pp. 3~4.
- 26) 통일부, 「평화와 화해·협력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pp. 16~17; 홍준호, “임동원 수석 강연 ‘남북냉전구조 깨 사실상 통일될,’” www.chosun.com/w21data/html/news, 1999. 2. 11; 홍준호, “김대통령 한반도냉전 해체 5개과제 제시,” www.chosun.com/w21data/html/news, 1999. 5. 6.

첫째, 남북한 적대관계 해소이다. 남북의 불신과 대결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그 요체를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면 만날 용의를 갖고 있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정상화이다. 한국 정부는 미·북관계 개선 없이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우선 미·북간 제네바 합의를 쌍방이 성실히 이행하면서 서로 위협을 감소시키고 미국 및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적절한 시기에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발전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이전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5월 5일 CNN과의 위성중계 회견에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꼭 서울을 거쳐 평양에 가야 한다거나, 미·일보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²⁷⁾고 말했다.

셋째,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이다. 한국은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와 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미·중·일·러 등 한반도 냉전과 관련 있는 국가들은 물론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5월 6일자 프랑스 「르몽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철회할 것과 일본이 전쟁배상금을 지불할 것 등을 요청하고 북한이 대외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²⁸⁾ 이는

27) 홍준호, “김대통령 한반도냉전 해체 5개과제 제시,” www.chosun.com/w21data/html/news, 1999. 5. 6.

28) 홍준호·김광일, “미는 제재풀고 일은 대북 배상을,” www.chosun.com/w21data/html/news, 1999. 5. 6.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군비통제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6·25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하려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통제, 제거하고 남북한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것을 냉전구조 해체의 핵심이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다섯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이다. 한국은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에서 '법적 통일(de jure unification)'에 앞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실상의 통일'이란 남북한이 각자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통일이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말한다.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내 군비통제를 위한 동북아 6자회담 등 다자안보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다자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이 기구에서 군사문제는 물론, 경제, 과학, 환경, 인권 등 비군사적 분야까지 다룰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몽골도 포함시켜 7자회담이 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²⁹⁾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3단계 통일론'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에 관한 방안에서 향후 다루어야 할 의제로 ① 정

29) 권대열, "유럽식 다자안보 '틀' 만들기," www.chosun.com/w21data/html/news, 1999. 5. 12.

치적 신뢰구축을 위해 무력 불사용, 불가침 선언, 핵사용 불가 선언, ② 세계적 신뢰구축 제도에 적극 참여, ③ 초보적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④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감축·동결의 실천, ⑤ 경제·과학기술·환경·인권·문화·난민·마약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³⁰⁾

한편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월 14일 국가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천명한 직후 임동원 당시 외교안보수석은 한반도 주변4국에 대한 외유를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서 그는 1월 말 미국, 2월 초 일본, 2월 중순 중국, 3월 말 러시아를 각각 방문하여 고위 외교관계자들을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했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주변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상기와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하고 있다.³¹⁾

첫째, 우선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노력과 함께 이러한 북한의 위협이 뿌리내리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근본적 해결노력을 병행추진하자는 것이다.

둘째, 대북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고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등 화해와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셋째, 포괄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즉 상기의 다섯 가지 근본방안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미·일을 포함해 한반도문제

30)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1995), p. 119.

31) 통일부,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pp. 17~18.

당사자들이 안보문제와 함께 정치·외교·경제·통상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넷째, 단계적인 접근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냉전구조의 해체는 장기적인 프로세스인 만큼 문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이정표에 따라 추진하되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일괄타결 방식을 따라야 한다.³²⁾

다섯째,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 추진해야 한다.

한편, 미국 정부는 금강리 핵시설 의혹 문제와 관련, 배수의 진을 치고 북한과 협상한 결과 3월 17일 현장방문과 식량지원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3월 위기는 도래하지 않게 되었다. 한·미·일 3국은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고위협의회를 통해 포괄적 접근방안의 주요 내용과 구성 순서 등에 합의하였고, 미국의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3국의 공동구상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당국간 대화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북한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이 와서 한반도문제가 한국식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 북한의 입장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지금까지 어떠한

32)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2월 10일 도쿄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에 줄 것은 미·북, 미·일 수교, 경제협력, 북한의 안전에 대한 보장 등이며 반대로 북한에 얻어낼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수출 중지, 한반도에서 무력도발을 절대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호, “DJ 해법, ‘북한 포용’ 미·일·중 끌어들이다,” 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2.11.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 적이 없다. 북한은 다만 평화협정 체결이나 평화보장체계의 수립 등을 제의하고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개념과 평화유지방법 및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고찰하고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방안의 관련 사안들에 대한 북한의 기본입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평화란 일반적으로 “전쟁이 없으며 분쟁들이 군사적 무력수단에 의하지 않고 조정·해결되는 상태”³³⁾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는 평화를 “전쟁이나 무력충돌 없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사회가 평온한 상태”³⁴⁾라고 정의한다. 반면 북한의 평화개념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의 착취계급에 의한 외부적 평화인 ‘노예의 평화’와 제국주의의 섬멸·종식과 세계혁명의 완수 이후에 오는 평화인 ‘항구적인 평화’를 구별하면서, 자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과 자기 계급을 해방하기 위한 혁명전쟁을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전쟁으로 인정하고 있다.³⁵⁾ 즉 북한은 한반도에서 의세가 배제되고 민족이 자주적인 입장에 설 때 평화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어지고, 객관적으로 북한에게 힘이 유리한 상황이 되어 한반도가 북한에 의해 사회주의식으로 통일될 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3) 국제정치학에서 평화의 개념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되며 상기와 같은 해석은 소극적 평화 개념이다. 평화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Egbert Jahn, “Frieden,” in Dieter Nohlen (ed.), *Pipers Wörterbuch zur Politik 1 Politikwissenschaft* (München: R. Piper GmbH & Co. KG, 1985), p. 254 참조.

34) 「국어대사전」(서울: 삼성문화사, 1987), p. 1731; 이호재 편, 「한반도평화론」(서울: 법문사, 1986), p. 326.

35)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p. 633~635, 498~500; 이호재 편, 「한반도평화론」, p. 328에서 재인용.

평화유지방법과 관련,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여 왔다.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북한의 주장 내용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었고, 다소의 변화를 보여 왔다. 즉, 1단계(1962~1974)는 북한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시기, 2단계(1974~1984)는 북한이 남북 평화협정에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주장으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한 시기, 3단계(1984~1991)는 북한이 남북 불가침선언과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시기, 4단계(1991~현재)는 북한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 미군철수 등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 시기이다.³⁶⁾

1990년대 초 이후 북한은 남북한간에는 불가침선언을 하고 ‘조국해방전쟁’의 당사자인 미·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규정과 이에 입각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서 남북불가침선언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고 미·북간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³⁷⁾의 수립을 제의하는 한편,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북한군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는 정전협정을 사문화, 무력화시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정책으로서, 북한의 이러한 정전협정 무력화 책동은 동년 5월 「조선인민군 판문

36)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성호,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전략: 내용, 의도 및 문제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민족통일연구원 제16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5. 6. 21), pp. 8~16 참조.

37) 제성호는 “‘평화보장체계’는 단지 북한이 이해하는 바의 평화를 보장해주는 기구(즉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할 기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 북한식 평화구상 실현을 위해 복무하는 기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내지 체제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의 글, pp. 16~17.

점 대표부」 설치와 12월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중국군 대표의 철수, 1995년 4월 체코 대표단과 5월 폴란드 대표단의 중립국 감독위원회로부터 철수를 통해 계속되었다. 북한이 이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마저도 사문화,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의 기본입장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 안보정세와 관련, 김정일은 한반도문제가 외피(外皮)와 내핵(內核)이라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단단한 외피는 미국과 군사적인 것, 내핵은 남북관계와 대내적인 것이다. 김정일은 외피를 벗기지 않고는 내핵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외피를 제거하기 위한 대외적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을 그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다.³⁸⁾ 따라서 김일성 시대와 같이 김정일 정권에게도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관여(military presence)가 가장 심각하게 인지되는 안보위협인 것으로 평가된다.

즉 북한은 해방직후 시작된 미국의 군사적 관여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고 그 결과로 남북한이 대결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전협정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은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의 철수이고 이에 따라서 중국군이 오래 전에 철수했으나 미군만이 불법적으로 한반도에 남아 있는 외국군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남한에 방대한 무력을 주둔시키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항상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정전체제가 파괴된 조건에서 한반도의 전쟁발발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정전협정이 미·북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킬 평화조약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면 또한 미군이 한반도로

38) Kim Myong Chol, "Kim Jong Il's Roadmap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Prospects of 4-Party Peace Talks," www.nautillus.org/napsnet/fora/13a_KimMC.html, January 6, 1998.

부터 철수하지 않는다면 김정일 정권은 지구상의 유일한 초강국이고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의 전쟁 재개 위험성의 심각한 위협에 계속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³⁹⁾ 결국 김정일은 미국과 평화협정 없이는 한반도문제의 어떠한 해결도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남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 김정일 정권은 냉전이 종식된 오늘날에 와서까지 한반도가 동족간 대결과 분열의 무대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남한의 사대와 외세의존에서 찾고 있으며 남한의 역대 정권을 연속적, 파쇼적, 반통일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⁰⁾ 특히 북한은 1999년 2월 12일 「중앙통신」, 언론매체(KCNA) 비망록을 통해 ‘국민의 정부’ 1년이 ‘사대매국, 반통일’의 한 해였다고 비난하는 한편, “남조선 집권자는 햇볕정책이니 일팔타결이니 하는 것을 또 다시 들고 나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⁴¹⁾ 북한은 통일되어야 한반도는 물론 주변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1997년 7월 1일 자본주의 홍콩이 사회주의 중국으로 귀속된 것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도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다.⁴²⁾

한국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과 관련되는 사안들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 북한은 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남북간의 폭넓은 대화를 위해서는 남한의 자주화, 연북화해 정책, 콘

39) 위의 글; 「로동신문」, 1999. 1. 6.

40) “당보·군보 공동사설,” 「조선중앙방송」, 1998. 1. 1; “정당 단체 연합회의,” 「조선중앙방송」, 1998. 2. 18.

41) 통일연구원, 「계간 북한동향」(1999. 3), pp. 251, 262.

42) 「로동신문」, 1998. 2. 11.

크리트 장벽과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외세와의 공조파기 등의 선행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1998년 초에 북한은 “북과 남은 일찍이 없었던 단절과 폐쇄와 대결의 상태에 처하여” 있다고 밝히고 그 원인이 남한의 ‘반북대결 정책’에 있으며 “외세와 결탁하는 이른바 국제공조 체제는 북남사이를 더욱 벌여지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 당국자들이 정책전환을 하여 민족자주의 입장에 돌아서야 하며 “반북대결 정책을 연북화해 정책으로 바꾸고 콘크리트 장벽을 허물어 버리며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안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북한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존속시키고서는 “그 누구도 통일에 대하여 말할 수 없고 협력과 교류에 대하여 논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북남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선포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남조선의 모든 정당 단체들이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적극 지지해 나설 것”을 호소한 바 있다.⁴³⁾

북한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이 경과한 1999년 1월 1일 신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을 통해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북남관계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족대단결’, 남한의 ‘자주화’ 등을 요구하고 연공연북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부·안기부 해체 등을 되풀이하여 주장하였다.⁴⁴⁾ 한편 북한은 2월 3일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의 명의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남한 각

43) “당보·군보 공동사설,” 통일연구원, 『계간 북한동향』 (1998. 3), p. 417; “북한 정당·단체 연합회의,” 통일연구원, 『계간 북한동향』 (1998. 3), pp. 420~424.

44) “'99년도 북한 신년 '공동사설' 전문,” 통일연구원, 『계간 북한동향』 (1999. 3), pp. 336~337.

계 인사 150명에게 보낸 편지에서 “올해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정하고, 당국대화를 포함한 북남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자”면서 “남측이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선행조건을 이행하면 하반기에 고위급 정치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고위급 정치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대책을 기본의제로 할 수 있고, 교류협력과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간의 당면한 문제들도 협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록 수용하기 힘든 전제조건을 달긴 했으나 대화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의 공식 대남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월 8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남조선 당국이 긍정 평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전제조건의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⁴⁵⁾ 현재 북한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을 기본적으로 ‘반북대결 정책’ 또는 ‘흡수통일만을 내다보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⁶⁾

둘째, 대미와 대일 관계정상화 문제와 관련, 북한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미·북 양국은 1994년 10월 21일 채택된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1995년 9월 23일 미 국무부 한국담당관 골드스타인(Jeffrey Goldstein)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원칙에 합의하고 연락사무소 개설 전까지 임시 영사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의 영사권 보호는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의 외교관이 대리하기로 하였으며, 북한의 영사보호권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관장하기로 하였다. 이후 1996년 3월 16일 리

45) 김인구,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 오는가,” www.chosun.com/w21data/html/news, 1999. 2. 4.

46) 「러시아방송」, 1999. 8. 19.

차드슨(Spencer Richardson) 평양 주재 연락사무소 내정자의 평양 방문 등 몇 차례의 접촉을 통하여 미국이 평양에 임시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97년 11월 26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개최된 미·북간 준고위급 회담, 1998년 3월 13일 베를린에서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와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비공개 양자회담에서도 연락사무소 개설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연락사무소 개설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워싱턴 주재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비용문제 이외에도 주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한 미·북간 상시 접촉채널이 열려 있고, 평양주재 미국 연락사무소의 개설이 체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연락사무소 개설을 경제제재의 해제를 위한 협상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⁴⁷⁾ 1999년 9월 12일 미·북간 베를린회담 타결로 수교를 비롯한 관계 개선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측되나 북한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대일 관계정상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1997년 말까지 적극성을 보였다. 1991년 1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개최된 8차례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북한은 1996년 말부터 대일 접근을 강화하면서 일본인 처 고향방문을 관계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였다. 양국은 1997년 8월 북경 외무부 심의관급 접촉에서 “대사급 국교정상화 협상의 본회담을 가능하면 빨리 개최하며 회담일시, 장소,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은 양국의 대사관을 통해 조정한다”라고 합의하였고, 2차례 북송 일본인

47) 박영호,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32~33.

처 27명의 고향방문도 1997년 11월과 1998년 1월 실시되었다. 그러나 일본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한 수교협상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강경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1998년 2월 11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고 미해결 문제는 회담개최 날짜를 합의하는 것뿐인데 일본측이 근거도 없는 행불자문제를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와 본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⁸⁾

1998년 후반기에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문제가 터진 이후 일본 정부는 북한과 제3국에서 비공식 접촉을 하는 한편, 1999년 1월 19일 오부치 일본총리 및 고무라 외상은 국회 시정연설과 외교연설에서 “북한의 건설적 대응에 따라 관계개선의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는 등 대북 대화재개의 의사를 보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이 미사일 재발사 문제를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면 관계개선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나 핵의혹이 아니라 일본의 반복적대시 정책과 과거청산 회피에 있으며 피해에 대한 무조건 보상부터 하라고 비난하였다.⁴⁹⁾ 그러나 북한 노동당은 식량지원을 얻을 목적으로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정당대표들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초청하고 양국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취한 식량지원과 국교정상화 협상 동결 등 제재조치를 해제하게 되었고 2000년 초에 양국간 수교 본교섭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 북한은 ‘미국의 새전쟁 도발준비’를

48) 통일연구원, 「계간 북한동향」, (1998. 3), pp. 225~227.

49) 통일연구원, 「계간 북한동향」, (1999. 3), p. 154.

비난하는 한편, 합동군사연습 중지와 미군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걸프전 수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8년 3월 한국 주둔 미8군사령부와 미국 본토에 있는 3군을 야전군체제로 개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였고 "미국의 새전쟁도 발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를 통해 대내체제의 결속을 도모하고 김정일의 군사중시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한총련 등 일부 운동권세력들을 겨냥하여 주한미군 개편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또한 북한은 한·미간의 통상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전쟁열기를 올리면서 외세로부터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연습으로서 이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미 연합전시증원훈련'(RSOI)을 '제2의 팀스피리트' 훈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⁵¹⁾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한이 미국과의 군사·정치 협력을 포기하고 3만 7,0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호소하고 그러한 요구조건이 수락될 때만 한반도문제의 포괄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⁵²⁾

넷째, 주요 대량살상무기인 핵 및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있고 자신의 핵위협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미사일이 자주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1999년 9월 12일 미·북간 협상이 베를린에서 타결됨으로써 북한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해제와 적성국에서 북한 제의 등을 대가로 미사일 재발사를 자제하

50) 통일연구원, 「계간 북한동향」(1998. 3), pp. 235~237.

51) 위의 책, p. 422; 통일연구원, 「계간 북한동향」(1999. 3), p. 183.

52) 「러시아방송」, 1999. 9. 8.

기로 하였다.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문’ 채택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중단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1998년 8월 금창리 지하 핵시설이 다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일으켰다. 또한 북한은 동년 8월 31일 ‘대포동 I’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미 의회는 북한 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1999년 5월말까지 ‘대북협상의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도록 요구했고,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심각한 사태발전이라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북한은 1998년 10월 13일 “ ‘지하 핵시설,’ ‘탄도미사일 발사’ 주장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무장해제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내 일부 강경론이나 합의문 재검토 주장들이 미국의 정책이라면 막을 생각이 없으며 불편하면 합의문을 깨도 무방하다”⁵³⁾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 특사가 1998년 11월 16~18일 북한을 방문하여 금창리 시설의 핵관련 활동 의혹해소를 강조하였으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한이 현재 핵개발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지하시설에 접근하려면 보상을 하라고 주장하였다. 12월 4~1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미·북회담도 북한의 현장접근에 대한 보상 요구와 미국의 수용 거부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북한은 1999년 1월 11일 외무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찰 대가로 3억 달러나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을 요구하였고,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제3차 회의(1. 16~17, 23~24)에서 미국의 현장접근 문제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힐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미국과 북한은 1999년 3월 16일 금창리 의혹시설에 대한 방문

53) 「조선중앙통신」, 1998. 10. 13.

조사 등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1999년 5월에 1차, 2000년 5월 2차, 추후 의혹이 남아 있는 한 추가 방문이 가능하게 되었고 북한에 1998년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규모 50만톤 정도의 식량과 NGO를 통한 시범 농업지원 사업(씨감자, 식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3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합의사항의 실천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 그 책임을 미국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었다.⁵⁴⁾ 미·북간 합의에 따라서 1999년 5월 20~24일 미국의 14명 전문가팀이 북한측으로부터 충분한 협력을 받아 조사활동을 하였으나 핵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미국과 북한은 1999년 3월 29~30일 평양에서 제4차 미사일 협상을 갖고 미사일 개발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였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미국측이 미사일 추가발사에 대해 강한 경고를 전달하면서, 미사일의 개발·생산·배치·수출중단 및 「미사일통제체제」(MTCR) 가입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해결을 주장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미사일 수출을 현금보상에, 미사일 개발·생산·배치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포기에 연결시킴으로써 관련사항을 분리시켜 대응하였다.⁵⁵⁾ 이후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서 역내국가들이 크게 우려하였으나 9월 12일 베를린 미·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 재발사를 자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개발, 생산, 발사시험, 수출 등 모든 것을 완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와 관련, 북한은 미·북

54) 통일연구원, 「계간 북한동향」(1999. 3), pp. 172~174.

55) 위의 책, pp. 195~198.

간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고 미군이 남한으로부터 철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정전협정마저도 사문화, 무력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16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서명 관련국인 미국 및 중국간의 4자회담을 제의하게 되었다. 그 동안 1차의 공동설명회(1997. 3. 5; 뉴욕), 2차에 걸친 후속회의(4. 16~21, 6. 30; 뉴욕)와 3차에 걸친 예비회담(8. 5~7, 9. 18~19, 11. 21; 뉴욕) 및 6차에 걸친 제네바 본회담(12. 9~10, 1998. 3. 16~21, 10. 21~24, 1999. 1. 18~22, 4. 24 ~27, 8. 5~9)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제안한 4자회담을 공동설명회, 후속회의, 예비회담 등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지연시키다가 1997년 12월에야 비로소 본회담에 참석하였다. 북한은 자신이 이에 참가한 이유를 ① 김일성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 클린턴과 김정일의 당 총비서 취임을 축하한 국무성 및 홍수 피해에 대해 최대 서방지원국인 미국에 대한 유교적 예의, ② 회담의 초점을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관여(presence)에 맞추겠다는 미국의 약속, ③ 식량지원과 관계개선 및 근 50년간 지속된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약속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⁵⁶⁾ 이 가운데서 김정일은 특히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관여를 변화시키는 문제에 중대한 전략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차에 걸친 본회담에도 불구하고 관련 4국대표들은 제4차 본회담

56) Kim Myong Chol, "Kim Jong Il's Roadmap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Prospects of 4-Party Peace Talks." 반면 미 정부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문제에 대한 초점과 지속적인 식량지원 원조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을 부인하여 왔다.

을 통해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2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운영에 관한 절차에만 원칙적으로 합의했을 뿐 의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측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주요 군사훈련 상호통보, 군 인사 상호교류 등 3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4자회담의 정례화를 제의하였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 제거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긴장완화 분과위원회의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여 왔다.⁵⁷⁾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양국간의 문제로 4자회담에서 논의할 수 없으며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결국 북한의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제6차 본회담 개최 직전 “우리는 북남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4자회담에 참여할 명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4자회담 개최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회담에 참가하지 안겠다”고 밝히고 “유리한 조건은 주한미군 철수,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⁸⁾ 이에 따라서 제7차 본회담 개최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동북아 6개국 회의’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98년 2월 11일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중국 방문 과정에서 동 구상을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은 ‘청탁외교를 통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하고 그 이유로는 동북아 현 실정은 헬싱

57) 『동아일보』, 1999. 1. 20, 1. 22; 『중앙일보』, 1999. 4. 26.

58) 『조선일보』, 1999. 8. 10; 『동아일보』, 1999. 8. 11.

키선언이 나온 1975년의 구라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과 동북아는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가 하면 법률적인 교전상태마저 종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같은 북한의 거부 태도는 그 동안 북한이 동북아안보협의체 구성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① 대미·일 관계정상화(양자관계의 정상화), ② 대미 평화협정 체결, ③ 미군철수 등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⁵⁹⁾

59) 통일연구원, 「계간 북한동향」 (1998: 3), pp. 310~311.

Ⅲ.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 미국

가.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기조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에 걸쳐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자유주의 체제수호에 긴밀히 협력하였다. 냉전기간 동안 미국의 세계전략은 기본적으로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소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대한반도 정책은 한·미 연합군의 방위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이 북·미 직접협상 및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북한과 협상할 수 없다며 북한측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화해·협력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국의 대북정책도 점차 변화하였다. 1994년 10월 21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보면 탈냉전기 미국이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다.⁶⁰⁾ 새로운 전략은 탈냉전기 국제질서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지역분쟁에 의한 지역정세의 불안정, 러시아를 비롯한 구 사회주의권의 민주화 개혁의 실패 위험성, 국가안보와 직결된

60)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pp. 5~6.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4대 주요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새로운 안보전략의 핵심은 강력한 군사력과 미군의 해외 주둔을 바탕으로 한 안보능력 제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국 국내경제 회복, 그리고 구 사회주의권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즉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관계에 적극 개입(engagement)하며,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대(enlargement)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개입·확대전략에 입각하여 냉전시기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유지해 온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점진적으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 의원 및 보수세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핵동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윈스턴 로드(Winston Lord)는 대북정책에 관한 클린턴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네바 합의 이행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확대 등의 3가지로 제시하였다.⁶¹⁾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개혁·개방을 유도하게 되겠지만, 북한의 연착륙(soft-landing)은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대북정책의 목표가 아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조기붕괴나 연착륙보다는 4자회담, 미사일 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한·미관계는 점차 군사동맹의 성격이 약화되고 정치·군사·외

61) Winston Lord,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 March 19, 1996.

교·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 안보협력관계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대남 적대정책 및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바, 미국은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종식된 이후에도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관련된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표명하고 있다.⁶²⁾

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북한 핵·미사일 문제

미국은 탈냉전기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이후 미 국무부 인사들은 북한이 일정 시점에 이르러 핵합의를 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수락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⁶³⁾ 이들은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개발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5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수십개의 핵무기를 보유하

62)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November 1998), pp. 22~26.

63)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리 Charles Kartman은 1997년 2월 26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대북한정책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최근 성공을 거두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북관계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낙관하였다. Charles Kartma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February 26, 1997.

고 있을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동결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998년 8월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문제가 제기되자⁶⁴⁾ 미 국무부는 북한이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네바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미국은 북한과 금창리 지하시설 성격 규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3월 16일 최종합의에 도달하였다. 북한은 미국 대표단이 동년 5월 금창리 시설을 방문토록 초청하며, 미국은 북한의 사찰 수용에 대한 대가로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50만t, 미국 민간기구를 통한 씨감자 1천t 및 식량 10만t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후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20~24일 핵문제 전문가들이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한 후 핵개발 흔적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은 북한과 1996년 4월 20~21일 제1차 미사일 회담을 개최하였다. 미국은 미사일 협상을 통해 북한의 이란-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⁶⁵⁾안에 묶어 두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하면 북한을 테러국가명단에서 제외하고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

64) 1998년 8월 17일자 「뉴욕타임즈」가 북한이 평안북도 금창리 지역에 대규모 지하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를 발표하였다. David E. Sanger, "North Korea Site An A-Bomb Plant, U.S. Agencies Say," *The New York Times*, August 17, 1998.

65) 미사일기술통제체는 미사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1987년 미국 주도로 서방 7개국이 만든 비공식 협정으로서 사정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과 그 부품 및 기술을 서로 수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국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일종의 자발적인 수출규제 약속이다. 회원국은 현재 32개국으로서 남북한 모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일 개발과 생산, 배치는 자위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미국측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1997년 6월 11~13일 제2차 미사일 회담을 개최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8년 8월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실험발사한 직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자⁶⁶⁾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1999년 6월 이후 북한이 사거리 4,000~6,000km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발사 준비를 하자 미 국무부 카트먼(Charles Kartman) 한반도평화회담 특사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미사일 실험발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1999년 9월 7~12일 베를린 회담에서 미국은 미·북 관계개선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 미사일 실험발사를 동결하겠다는 북한측의 약속을 받아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유예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 유예조치에 합의했지만, 미사일 개발·수출을 둘러싼 미·북간 미사일 회담은 담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1998년 10월 1~2일 제3차, 1999년 3월 29~30일 제4차 미사일 회담을 진행하였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단지 제3차 협상에서 북한은 향후 3년간 해마다 10억 달러를 보상할 경우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 표명한 바 있다. 여하튼 북한은 1999년 9월 25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제5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

66) 1999년 2월 의회 청문회에서 터넷 CIA 국장 등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증언하였다. George J. Tenet, *Current and Projected National Security Threats*, Hearing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February 2, 1999.

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에 신의 있게 호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경제제재 해제 및 대북 식량지원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에 참여하여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50만톤(5,000만 달러 상당)의 중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1995년 1월 20일 여행, 언론취재와 통신, 금융거래, 특정품목에 대한 교역허용, 원자력분야 사업 등 4개 부문에 걸쳐 제1단계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제1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관련법규를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한 부분에 국한되어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즉, 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⁶⁷⁾에 의한 전반적인 수출금지에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북한과 상업거래를 할 수 없으며, 미국은행을 이용한 대북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제 하였지만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관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1995년 8월 북한이 수해재난을 겪은 이후 미 국무부는 식량난에 의한 북한 체제붕괴 및 대남 도발 가능성

67) 미국은 1950년 11월 적성국교역법에 의거하여 대북 봉쇄조치를 취하고, 동년 12월 7일 해외자산통제규정에 의해 미국내 북한자산을 동결시키는 한편, 대북 교역 및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였다. Zachary S. Davis et. al.,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November 29, 1994), p. 22.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개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96년 초 국무부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대북 지원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고, 재무부는 대북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외자산통제규정을 일부 완화시켰다. 또한 상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물품을 제공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였다. 이로써 클린턴 행정부는 구호용 식량과 현금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한 법적 제한을 사실상 전면 해제하였다. 그후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⁶⁸⁾ 미국은 또한 한국전쟁시 실종된 미군의 유해송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북한측에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⁶⁹⁾

클린턴 행정부는 페리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1999년 9월 17일 적성국교역법·방산물자법·수출관리법 등 3개 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처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실시하였다.⁷⁰⁾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 상품의 미국내 반입과 미국 상품의 북한 수출이 대부분 허용되고, 민간 및 상업용 자금의 송금과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및 화물운송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 기업의 북한에 대한 농업·광업·석유화학·목재·시멘트·운수, 도로·

68)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대북 원조가 1995년 이래 6억 4,500만 달러에 이르지만, 5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1만 4,000t과 중유 1,100만t이 군용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News from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Gilman: North Korea hold out one hand for aid, while in the other hand it holds a gun," www.house.gov, November 3, 1999.

69) 미국과 북한은 1996년 1월 10~12일 하와이에서 제1차 미군 유해 송환협상을 개최한 후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미국은 유해 발굴 보상비로 1997년 총 31만 6,500달러, 1998년 총 67만 2,000달러를 지급하였다.

70)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Press Briefing by Joe Lockhart," www.fas.org/news/dprk, September 17, 1999.

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군사용 및 이중 용도 사용이 가능한 민감한 품목과 기술의 대북 수출 및 이를 위한 미국측의 자금지원은 이 완화조치에서 제외되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 역시 규제대상으로 남아 있는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협상에 대한 태도변화 및 개방·개혁 정도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3)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개의 축이 조화·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네바 합의와 관련된 클린턴 행정부의 기본노선이다. 미국 정부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북·미관계도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클린턴 행정부보다 남북관계 개선문제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1995년 1~2월에 걸쳐 몇 차례의 청문회를 열고 제네바합의문의 결함을 비판하였다.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이 NPT협약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결시키기 위해 막대한 반대급부를 약속한 것은 다른 불량국가들에 대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제네바 합의가 국제적 조약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 형태로 추진된 것과 관련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상·하양원 의원들은 제네바합의가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합의사항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수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1995년 3월 베루터(Doug Bereuter)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장 주도로 채택한 결의안은 클린턴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측에 대해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비무장지대 북한군 병력 후방이동, 중거리 미사일 배치 금지, 핵·미사일 기술 수출 금지 등의 요건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하였다.⁷¹⁾ 아울러 대북 지원 및 KEDO 관련 예산지출은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상·하원의 다른 결의안들도 KEDO 관련 예산지출을 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의무 준수, 남북관계 진전 노력 등을 상호 연락사무소 이상의 미·북관계 격상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을 수시로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실질적으로 별로 취하지 않고 있다.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관해서는, 미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에 협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였다. 그러나 평화협정에 관한 북한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보다는 이를 적절한 협상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낀 한·미 양국은 1996년 4월 16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

71) 104th Congress, 1st Session H. J. Res. 83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은 법률안(bill)의 경우와 같이 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의 서명을 요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합동결의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북한·미국·중국 대표간의 4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공동제의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4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4자회담을 통해 남북간 화해와 신뢰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 참여 조건으로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및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4자회담 의제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본회담 개최는 지연되었다.

1997년 12월 9~10일 제네바에서 4자회담 제1차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제1차 본회담에서는 차기 회의 의장국은 중국·한국·북한·미국 순으로 결정하는 등 회의 진행방식에 관한 합의를 보았다. 1998년 3월 16~20일 2차 본회담에서는 회담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 방법에 관해 논의하고, 1998년 10월 21~24일 제3차 본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각각 논의하는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후 1999년에 들어 1월 19~22일 제4차, 4월 24~27일 제5차, 8월 5~9일 제6차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연속적으로 개최된 4자회담에서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긴장완화조치 및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북한측이 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을 분과위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이후 한국은 물론 일본·중국·러시아와 긴밀한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일본·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남북한과 주변4강이 포함된 6자회담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자회담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는 회담의 효율성만 저하시킨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6자회담은 한반도문제 해결보다는 지역안보협력체 성격을 띄게 됨으로 북한이 참

여를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⁷²⁾ 그러나 향후 남북한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가면 4자회담과는 별개로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5) 동북아 다자협력에 대한 입장

클린턴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1993년 7월 클린턴 대통령은 다자간 대화 추진을 신태평양공동체 형성의 근간으로 제시하였다.⁷³⁾ 동북아지역 국가들 사이에 다자간 안보대화 창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자 샌디에고 대학 국제분쟁협력연구소는 미 국무부의 지원하에 1993년 7월 남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개국의 정부관리 및 민간인 학자를 초청하여 비공개로 '동북아협력대화'(NEACD) 설립에 관한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⁷⁴⁾ 그리고 1993년 10월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1차 NEACD 회의에서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5개국은 민간인 전문가와 정부 관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건립에 합의했다. 그후 NEACD는 동경·모스크바·북경·서울 등 개최장소를 바꿔가며 매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다자간 안보대화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기존 쌍무동맹관계를 보완하여 안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패

72) 주한 미대사 Stephen Bosworth와의 회담. Son Key-young, "US Pessimistic on 6-Party Security Talks: Bosworth," *The Korea Times*, October 21, 1998.

73) Michael Richardson, "Clinton, With Eye on Trade, Calls for a Pacific Rim Summi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9, 1993, p. 6.

74) 김국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레짐과 한반도 안보," 『한반도 군비통제』 (1995. 10), pp 32~33 참조.

권국의 등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APEC과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⁷⁵⁾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국가들과 다자간 안보대화 및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바,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약체는 장기적으로는 점차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이 지역안보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증강을 가속화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정착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6) 페리보고서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1998년 8월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및 미사일 실험발사 사건이 발생하자, 미 의회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고위급 인사를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여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회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11월 12일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으로 임명하여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임명 초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작이라며 강경 기조를 내비쳤다. 그러나 1998년 12월과 1999년 3월에 걸쳐 한국·일본·중국 등을 순방하여 이들의 대북정책에 관한 의향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

75)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November 1998, pp. 42-44.

책이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페리 조정관에게 북한측의 핵·미사일 포기 및 미국·일본측의 국교정상화를 통한 북한체제 보장 등을 포괄적으로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포괄적 접근 구상과 더불어 북한이 1999년 3월 15일 금창리 시설 사찰협상을 수용한 것이 페리 조정관의 인식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미·일 3국은 1999년 4월 24~25일 하와이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북정책을 조율하였다. 여기서 3국은 우선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면 정치·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대북 압박을 가한다는 대북정책 방안에 합의하였다.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1999년 9월 15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대북정책 권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⁷⁶⁾ 페리보고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미사일 재발사를 자제해야 하며,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일부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일본과 한국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일과 북한의 협력하에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페리는 이러한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정책건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북정책 추진에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미국 정부내에서 대북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간 대북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대사급 고위직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⁷⁷⁾ 셋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76) William J. Perry,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Washington D.C., October 12, 1999; 『조선일보』 1999. 9. 16 참조.

미국·한국·일본의 고위정책협의회인 '3자 조정·감독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을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 넷째, 미국 의회내에서 대북정책을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최근 진전된 상황을 볼 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대북포용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북한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리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만 조만간 붕괴될 가능성 등은 희박하다고 평가하였다.⁷⁸⁾ 따라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여 대북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이산가족 재회,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고,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마약밀매 문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논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페리보고서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해 온 길먼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1999년 8월 의회내 북한자문단(North Korea Advisory Group)을 구성하여 페리보고서에 대응하는 대북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⁷⁹⁾ 북한자문단의 보고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77) 현재 대북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Charles Kartman 한반도평화회담특사보다 높은 직급의 인사가 임명되어 미·북 고위급 회담을 주도하며, 국무부·국방부·재무부 및 의회 등 미국 정부기관의 대북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78) "North Korea Unlikely to Collapse Any Time Soon, Perry Says, US Department of State," www.usia.gov/cgi-bin/washfile, November 29, 1999.

79) 북한자문단은 Benjamin A. Gilman, Doug Bereuter, Sonny Callahan, Christopher Cox, Tillie K. Fowler, Porter J. Goss, Joe Knollenberg, Floyd Spence, Curt Weldon 등 공화당 의원들로 구성되어 초당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North Korea Advisory Group, "Report to the Speake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ww.house.gov.

북한은 5년 동안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고, 미사일 능력도 더욱 개발하여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러시아·중국과 더불어 세계적인 핵·미사일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 등을 실시하며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북한의 능력을 확대시킬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의 보고서는 페리의 대북정책 권고안을 대체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중국

가. 중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기초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안보와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한반도는 랴오닝성(遼寧省)과 지린성(吉林省) 등 중국의 동북지역과 접경하고 있으며, 발해만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부연안지역과 서로 마주하고 있다. 1950년 중국이 공산정권 수립직후 산적한 대내문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에 중국 전체 병력의 1/2 이상을 파병하였던 사실도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이었다.⁸⁰⁾

80) 周恩來는 중국이 한국전에 많은 병력을 파병한 이유를 한반도가 미군의 중국대륙 침략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슬회한 바 있다. 周恩來, “抗美援朝, 保衛和平,”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周恩來選集」,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1980), pp. 52~53.

특히 중국의 정치 중심지 베이징과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 동북삼성지역은 중국의 안보에 극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다. 중국 동북삼성지역에는 약 200만명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심각한 사태가 전개된다면 이들이 동요하게 될 수 있다. 한반도 급변사태시 북한주민들이 대거 중국 대륙으로 유입될 수 있고, 이들은 곧바로 중국사회에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⁸¹⁾

나아가 중국내 조선족들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중 몽고족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조국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들은 중국 공민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통일한국이 등장하게 된다면 중국보다는 통일한국에 귀속감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 동북삼성지역 조선족들의 민족의식 회복은 중국내 타지역의 소수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내이명구(內蒙古)자치구의 몽고족과 신장(新疆)과 시장(西藏)자치구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을 자극하여 중국의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내 조선족 사회를 동요하게 할 정도로 한반도에서 현상이 파괴되거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98년 8월 한국이 '재외국민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중국내 조선족 등 해외거주 한민족에게 재외국민 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국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정부에게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던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이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기 바라는 것도 한반도의 현상파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동독이 서독에 의해 흡수통일된 후 1년여만에 소련이 붕괴되었다는

81) 張建華 主編, 「中國面臨的緊要問題」(北京: 經濟日報出版社, 1998), pp. 107~108.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다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자신의 체제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된 이래 중국은 북한을 중국 자신의 체제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간주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소련붕괴 이후 줄곧 북한에 대한 최대의 정치·경제적 지원국으로 남아 있다.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1978년 이래 경제건설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육지로 2만km와 해양으로 1만 8,000km에 이르는 긴 국경선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안보적으로 취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은 충분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과 국력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 즉,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지역에서 안정과 평화상태가 유지되어야만 중국이 경제발전에 전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을 핵심 대외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⁸²⁾

이와 같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한반도정책의 최우선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지지

82)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鄧小平文選」(一九七五 — 一九八三年) (北京: 人民出版社, 1983), pp. 204~205. 또한 중국은 1998년 7월 「중국의 국방」, 제하의 국방백서를 공포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아태지역 안보전략의 3대 목표가 ① 중국의 안정과 번영, ②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 ③ 아태국가들과 대화와 협력 진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人民日報」, 1998. 7. 28.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3년 이래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을 때, 중국은 무력수단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정책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경우 한국, 일본 및 대만에게 핵무기 개발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심각한 불안정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적 압력과 무력수단을 통한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였다.⁸³⁾ 이와 같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관적인 정책자세는 북한과 한·미의 강경 입장을 완화시켜 19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 핵기본합의를 유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2)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중국은 250만명의 병력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 강대국이며, 개혁·개방정책 성공으로 경제력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의 국민총생산은 세계 7대국의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교역 규모는 3,200억 달러를 상회하여 세계 10대국에 들 정도로 확대되었다. 1998년의 경우 중국은 436억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1,450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⁸⁴⁾ 아울러 중국은 아시아의 유일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83) 「人民日報」, 1993. 6. 13; “錢其琛談中韓日關係,” 「文匯報」(香港), 1993. 5. 25; 「文匯報」(香港), 1993. 5. 23.

84) 中國國家統計局, “中華人民共和國1998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人民日報」, 1999. 2. 27.

정치 무대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주변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력이 증대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대내 경제발전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80년 당중앙 간부회의시 행한 연설에서 4개 현대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면 대만의 통일과 반패권주의 투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⁸⁵⁾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의 최종 목표를 대내 경제발전을 토대로 국가통일 실현과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데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는 19세기부터 일본이 중국대륙을 침략하는 데 징검다리로서 이용되는 등 중국의 안보와 번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요충으로 작용해 왔다. 중국은 1895년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일본 제국주의와 벌인 갑오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대만과 랴오둥(遼東)반도 지역을 일본에 할양하고 한반도에 대한 우월권을 상실하는 치욕을 겪었으며, 이후 일본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1931년 만주에 괴뢰정권을 수립하여 통치하는 한편, 1937년부터는 전 중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대중 전면전을 선포하였다.⁸⁶⁾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였을 때에도 중국은 미군이 한반도 38도선을 경유하여 중국대륙으로까지 진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

85)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p. 204.

86) 1931년 만주국 설립이후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王希亮, 『日本對中國東北的政治統治, 1931~1945』(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1) 참조.

여 한국전에 방대한 규모의 인민해방군을 파병하였다. 한국전 당시 조우언라이(周恩來) 중국 국무원 총리는 미군이 중국의 국경지대까지 진격하여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미쳤기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국전 참전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우언라이는 미국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후 중국 동북지역에 대해 침략전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파병을 정당화하였다.⁸⁷⁾

이처럼 한반도는 19세기말 이후 해양세력의 중국침략을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되어 왔다. 1840년 이래 중국은 해양세력으로부터 7차례 걸쳐 군사공격을 당하였는데,⁸⁸⁾ 이 중 두 차례는 한반도를 경유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의 정치 중심지인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에게 적대적인 국가의 영향권내에 완전 편입되는 것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개혁·개방을 통해 서양의 국제질서관을 대폭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도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는 전통적 질서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脣齒關係’ 또는 ‘兄弟之邦’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 정

87) 周恩來, “抗美援朝, 保衛和平,”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周恩來選集」, 下卷(北京: 人民出版社, 1980), pp. 52~53. 한반도가 해양세력의 對중국 침략에 징검다리로 사용되어 왔다는 중국인의 시각은 張建華 主編, 「中國面臨的緊要問題」(北京: 經濟日報出版社, 1998), pp. 104~106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88) Ji Guoxing, “China Versus South China Sea Security,” *Security Dialogue*, Vol. 29, No. 1 (March 1998), p. 102.

치·경제적 시혜를 베풀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은 북·일 수교 교섭 및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1992년 8월 중국이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일본이 대북한 수교교섭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1991년 1월부터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국 동북부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북한과 수교교섭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대북 접근 정책은 중국의 전략가들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걸프전에서 막대한 전비를 분담하고서도 이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본정부는 북한과 수교교섭을 전개하고 캄보디아에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대국화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일본의 대북 수교교섭 진전에 따른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였던 것이다.⁸⁹⁾

또한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미간 기본합의문이 체결되었는 바, 이를 계기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국제사회에 '중국위협론'을 제기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였고, 1994년 9월에는 對대만 관계격상 정책을 채택하였다.⁹⁰⁾ 이로써 중·미간에는 대립과 긴장국면이 지속되었다. 이러

89)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신상진, 「중·북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8~10; 杜攻 主編, 「轉換中的世界格局」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2), pp. 314~323 참조.

90) 1994년 9월 미국은 대만관리의 미국방문을 용이하게 하고, 미국주재 대만대표부의 공식 명칭을 「北美事務協調委員會」에서 「駐美 臺北經濟文化代表處」로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

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정책을 중국견제 의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중국은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후 최고지도자들의 한국방문을 통해 한국과의 정치·외교관계 증진을 모색하였다. 1994년 10월말 리펑(李鵬)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1995년에는 중국 공산당내 서열 1위와 3위인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차오스(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중국이 한국과의 정치·외교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였던 것은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이 남북한에 대해 균형외교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한반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국과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과 미, 일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⁹¹⁾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은 두 개의 한국정책을 전개함으로써 남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정책은 중국의 국력이 증대될수록 강화될 것이며, 중·미, 중·일관계가 경쟁과 대립구도로 전개될수록 심화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력 및 군사력을 더욱

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91) 1998년 「政府工作報告」에서 중국은 한반도정책 기초를 “북한과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한국과 호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데 두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8. 3. 6; 1999년 「政府工作報告」에서는 중국과 북한, 한국과의 관계가 한층 발전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人民日報」, 1999. 3. 18.

증강하게 되면 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행동의 제약을 덜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견제 또는 봉쇄정책을 노골화하고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력 증강정책을 표면화하면 할수록 중국은 미·일의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 끌어안기와 한국 접근정책을 적극화할 것이다.

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한반도에 대한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국면이 완화되고, 북한의 대미·일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 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남북 관계개선 문제

중국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대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공동선언에서도 한반도문제가 한민족 당사자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중국이 분단국문제의 당사자간 해결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은 주변 4국중 유일하게 남북한과 동시에 국교를 맺고 있고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등 다른 주

변국보다 한반도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남북한 관계개선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이다. 남북한관계가 악화되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게 되면 중국의 대미·일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한과의 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은 1991년 12월 남북이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을 때에도 한반도정세 완화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⁹²⁾

남북한관계 개선을 바라는 중국의 입장은 제네바 4자회담과 한·중 및 중·북 지도자간 회담 등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한·미가 공동으로 4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을 당시만 해도 4자회담이 미국과 북한 주도에 의해서 개최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소극적이었으나, 1995년 9월 강릉 잠수정 사건이후 남북한관계가 악화된 후 4자회담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4자회담 본회담 개최이후 중국은 회담에 적극 참여하여 남북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차원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 지도부와와의 접촉시에도 남북한관계 개선을 설득하고 있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1999년 6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기초라면서 남북한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⁹³⁾

중국은 남북한간 상호 불신이 한반도의 갈등을 야기하는 핵심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부

92) 「人民日報」, 1991. 12. 14.

93) 「人民日報」, 1999. 6. 5.

가 추진하는 대북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은 현대가 추진하는 금강산관광 사업을 통해 남북한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지지하였다. 중국은 과거 한국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의 대남 적대의식을 자극하는 데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김대중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⁹⁴⁾

(2) 미·북, 일·북 관계개선 문제

1994년 10월 제네바 핵 기본합의 이후 미·북 관계개선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1999년에도 북한 핵의혹시설과 미사일문제 처리과정에서 미·북은 관계개선 문제를 논의하였다. 북한이 대외고립 해소와 체제보장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체제 변화 유도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장래에 양국관계에 큰 진전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북관계가 개선되면 일본의 대북 접근정책도 보다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고립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지속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있다.⁹⁵⁾ 중국은 한국의 대러시아·중국 관계가 정상화한 반면 미, 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대

94) 虞少華, 吳晶晶, “曲折發展的朝鮮南北關係,” 『國際問題研究』, 1999年 1期 (1999. 1), pp. 40~42.

95) 虞少華, 吳晶晶, p. 42.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과와의 담화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미, 일, 유럽연합과의 관계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人民日報』, 1999. 6. 5.

외정책 자세를 계속 강경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의 비대칭적 대외관계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북관계가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⁹⁶⁾ 중국은 미·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1994년 말 미·북 관계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리펑, 장쩌민, 찌오스 등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앞다투어 한국을 방문하였던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 움직임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대미관계가 갈등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 정책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중국은 미·북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정상화되어야 하지만, 미·북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중관계가 갈등을 보이면 보일수록, 중국은 미·북관계 개선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일·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대외개방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세기말부터 일본의 침략을 받아온 중국은 일·북관계 개선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내에서 보수우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주변사태법안’ 통과와 ‘전역미사일방어체계’ 공동연구 작업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

96) 4자회담 제4차 본회담에서 중국대표는 미·북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을 경계하면서, 중국은 일본의 대북 관계개선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

지난해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발사문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데,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하지만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의 기도를 저지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이 최초로 외부에 밝혀진 것은 1998년 9월 장완니엔(張萬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미국방문 때였다. 장 부주석은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중국도 위협을 느낀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⁹⁷⁾

그후 중국의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1999년 오부치 일본총리의 중국방문시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⁹⁸⁾ 이는 바로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역할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동북아 정세안정을 저해하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강경정책이 전개될 수 있고, 이 경우 동북아정세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자동개입조항을 포함하는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97) 『文匯報』, 1998. 9. 17.

98) 『조선일보』, 1999. 7. 19; 장쩌민 주석도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에 불리한 일이라면 지지하겠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동아일보』, 1999. 9. 12.

에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할 경우 한반도 사태에 개입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보다 많은 자원을 군사력 증강에 투입해야만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일에게 군사력 증강의 구실로 이용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사태 진전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이 중국 자신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중 수교와 김일성 사망이후 중국과 북한 지도부간에 긴밀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중국과 북한관계가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만큼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 중국과 북한 지도부는 상대방을 점차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달갑게 보기 어려울 것이다.

1999년 8월 23일 조성태 국방부장관이 한국의 국방부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츠하오티엔(遲浩田)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속내를 보여주었다.

요컨대, 중국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 및 자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북한이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발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발사 저지를 위해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를 가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⁹⁹⁾ 1998년 8월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국

99) 우다웨이(武大偉) 주한 대사도 한국 언론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강제사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동아일보」, 1999. 1. 20.

제사회를 긴장시켰을 때에도 중국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던 것은 북한의 내정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일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대북 제재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1999년 북한이 다시 미사일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이에 대해 미·일이 강경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너무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보다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일이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구실로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군사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미·일이 북한의 미사일발사 문제를 과대포장하여 군사력 증강의 구실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1999년 3월부터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이용하여 유고에 대해 공습을 감행하였는데, 이후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개입하게 될 소지가 많아졌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의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양국론'을 주장한 뒤 중국과 대만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일본내에서 '주변사태법안'이 통과되고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극도로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¹⁰⁰⁾ 이처럼

100)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서는 陸忠偉, “脫離和平軌道新指針意欲何爲,” 『人民日報』, 1999. 4. 30; 唐天

미·일의 군사정책이 중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이는 결국 미·일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주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하는 용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반대하였다.

1999년 8월 주방자오(朱邦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간의 '엘지포커스훈련'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¹⁰¹⁾ 이 점도 역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내건 이유는 한·미 군사훈련이 남북한간 대화를 가로막고 북·미간 관계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한·미·일간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미간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일이 '전역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신안보협력지침' 발표 등을 통해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미간의 군사동맹관계 강화를 의미하는 행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내 미군주둔 문제와 관련, 중국은 즉각적인 철수를 원하지는 않지만 통일이후에는 반드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바라지 않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주한미군의 활동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주한미군이 기타 동아시아 사태에 개입해서는

日, “先發制人攻擊論의侵略本質,” 『瞭望』, 1999年 第32期 (1999. 8. 9), p. 54; 王新生, “日本向何處去,” 『世界知識』, 1999年 第12期 (1999. 6), pp. 12~14 등 참조.

101) 『文匯報』(香港), 1999. 8. 18.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주변사태법안'을 통과시켜 대만해협 사태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일이 '전역미사일방어체계'를 공동 연구하면서 대만을 여기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주한미군이 대만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처럼 동아시아 지역안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999년 8월 실시된 한·미간 을지포커스 훈련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방어적인 차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된다면 중국은 미국군대와 직접적으로 대치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 이후 주한미군이 중국군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다.¹⁰²⁾

(4) 북한의 변화유도문제

중국은 북한이 경제개방정책을 채택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안정시키기를 바라면서, 북한에게 경제개방을 직간접적으로 권유해 왔다.¹⁰³⁾ 중국은 북한이 경제개방정책을 채택하여 경제난

102)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신상진, “중국의 대북한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분석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관계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민족통일연구원-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워크샵 발표 논문집, 1998. 11), pp. 37~39 참조.

103)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시 장쩌민과 리펑 등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표적 경제개발지역인 상하이의 푸둥(浦東)지역을 시

을 해소할 수 있다면 중국의 부담이 줄어들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 주변정세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개방을 바라고 있다.

경제정책상의 괴리가 중·북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¹⁰⁴⁾ 북한이 경제개방정책을 적극 실시하게 된다면 중국 동북삼성지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중국과 상이한 여건에 있는 만큼, 중국은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개방·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과거 문화대혁명시기 '홍위병'의 북한정권 비난으로 인한 중·북관계 악화 경험으로 인하여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이후 중국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화평연변'(和平演變)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내정불간섭을 대외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강조해 왔으며, 1999년 4월 NATO의 신전략 개념과 미국의 대중 압력에 직면하여 내정불간섭 원칙이 신국제정치·경제질서의 핵심 개념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¹⁰⁵⁾ 이러한 상황도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정책변화를 유

찰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개방을 간접 권유하였다.

104) 북한의 김정일은 중국의 개혁과 지도자들을 '사회주의의 배신자'로 비난하기까지 하였으며, 북한의 '벼랑끝외교'는 중국이 미국 등 서구 자본주의국가들과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부담이 되어 왔다. 중국과 북한간의 개방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1999년 김영남의 중국방문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人民日報』, 1999. 6. 4.

105) 나토 신전략 개념에 대한 중국내 반대입장에 대해서는 蔣建清, "北約二十一世紀新戰略及其影響," 『國際問題研究』, 1999年 第3期 (1999. 7),

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5) 평화체제 전환문제

4자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상황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 중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이다. 북한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무실화하고 미국과만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남북한과 미, 중이 함께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1996년 4월 한·미가 공동으로 회의개최를 제의한 후 1999년 말까지 6차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다.

중국은 4자회담 제의 초기 대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미·북 양자에 의한 주도 가능성을 우려하여 4자회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북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중국은 4자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중국은 4자회담이 현실적으로 미·북 주도에 의해서 진행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대신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여 4자회담 제의 초기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 아울러 1996년 3월 대만해협사건 이후 조성된 미·중간 긴장국면도 4자회담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⁰⁶⁾

그러나 1997년 하반기부터 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하게 되고 1997년 9월 강릉 잠수정사건 이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은 4자회

pp. 15~19 참조.

106)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1998) 참조.

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1997년 중반 이후 미·중 관계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4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미·중관계 완화는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4자회담을 통해 남북한, 미·북관계가 개선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동 회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내 경제건설을 최우선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4자회담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4자회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¹⁰⁷⁾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평등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4자회담을 4국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일종의 다자안보협력 대화로 간주하여 4자회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¹⁰⁸⁾ 또한 중국은 4자회담의 성공적 진행이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107) 丁詩傳, 李強, “朝鮮半島和平機制及其前景,” 『現代國際關係』, 1999年 4期 (1999. 4), p. 44.

108) 중국은 미국의 NATO 확대와 대일동맹 강화정책을 냉전적 안보정책으로 비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안보’ 또는 ‘다자안보협력 대화’를 탈냉전시대의 신안보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다.

(6)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문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평화상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차원의 다자 안보협력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기 중국은 중국 봉쇄에 대한 우려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중국은 지역분쟁 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지역 안정유지 세력이라는 점을 호소·설득하는 동시에, 다자안보협력 논의를 자국에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¹⁰⁹⁾

1993년부터 장쩌민 주석이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에 7년 연속 직접 참석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의 신뢰구축과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아세안지역포럼」(ARF)에 계속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1997년 3월에는 중국이 ARF 신뢰조성회의를 직접 개최하였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주재한 최초의 다자안보협력회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¹¹⁰⁾

또한 중국은 동북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정부관리와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여 개최

109) Banning Garrett and Bonnie Glaser, "China Works on Its Design for a New Asian Security Structur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8-29, 1997; Kazuko Mori, "China's Pivotal Role in the Asia-Pacific Community," *Japanes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9, No. 3 (Summer 1995), pp. 231~233.

110) 1996년 중국은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주재하였는데, 이는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대화가 아니라 민간인과 정부관리가 함께 참여하는 '제2트랙' 형식의 다자회의이다.

되고 있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있는데, 중국은 1993년부터 계속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8기 전인대 2차회의 이후 계속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대한 참여 필요성을 ‘정부공작보고’에 명기하고 있으며,¹¹¹⁾ 1998년 중국 역사상 두 번째로 공표한 국방백서에서도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¹¹²⁾

이와 같이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문제에 대해 점차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평등참여, 상호 존중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가 미국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자국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태경제협력체’가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¹¹³⁾

둘째,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과정에서 평화공존 5원칙, 특히 내정불간섭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¹¹⁴⁾ 중국내 인권상황

111) 중국은 아태지역의 안보협력대화를 지지하며, 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4. 3. 11.

112)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國防,” 「人民日報」, 1998. 7. 28.

113) Guo Zhenyuan, “The Main Problems Affecting the Security in Asian-Pacific &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CCIS International Review*, No. 1 (August 1994), pp. 48~55.

114) 閻學通, “亞太地區安全形勢,” 「世界知識」, 1997年 第19期 (1997. 10), pp. 4~5; 時永明, “亞太安全中的矛盾與合作,” p. 47; 「文匯報」(香港), 1997. 12. 16.

과 대만문제가 중국과 서방국가간의 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시 인권문제와 대만문제 등 내정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 틀 내에서도 국가주권과 지역의 다양한 특성이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기구가 영토문제를 논의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현재 중국은 동남아 지역국들과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데, 이들 영토문제가 지역 다자안보협력 대화에 의제로 상정될 경우, 중국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 중국이 동남아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아세안지역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가 동 포럼에 의제로 상정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데 있다.

셋째, 중국은 양자간 안보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자안보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15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미, 일과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바, 우선 이들 국가들과의 양자간 안보신뢰를 조성한 다음 지역적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역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하면서 2국간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⁵⁾

그렇지만 중국은 양자간 안보동맹과 다자간 안보대화가 서로 양립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양자간 군사동맹은 제 3국을 겨냥한 냉전시대의 잔재이므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내에서

115) Guo Zhenyuan, "The Main Problems Affecting the Security in Asian-Pacific &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p. 53.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에 참여국간의 정치적 대화와 군사정책의 투명성 증대 등 주로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지역국간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분쟁발발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목적을 두어야 하며, 제3국을 견제·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¹¹⁶⁾

넷째,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가 특정국의 참여를 반대하는 배타적인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구속력을 가진 포괄적 안보기구로 발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다자안보협력체는 모든 주권국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성원국의 일치된 합의를 통해 안보협력에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⁷⁾ 다만, 중국은 대만과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국가자격으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¹¹⁸⁾

중국이 구속력을 가진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미·일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¹¹⁹⁾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협력체 형성 과정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116) 時永明, “亞太安全環境與地區多變主義,”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1期 (1996. 1), pp. 46~47.

117) 時永明, “亞太安全環境與地區多變主義,” p. 46.

118) 대만과 홍콩은 중국의 반대에 부딪혀 「아세안지역포럼」과 「동북아협력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Guo Zhenyuan, “Asian-Pacific Region Remains Peaceful,” *Beijing Review*, February 5~11, 1996, pp. 9~10.

119) 高木 誠一郎, “中國とアジア太平洋の多國間安全保障協力,” 「國際問題」, No. 442 (1997. 1), pp. 62, 67; Kazuko Mori, “China’s Pivotal Role in the Asia-Pacific Community,” p. 233.

국력이 상대적으로 증강될수록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전망이다.

3. 일본

가. 일본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기조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경제성장과 국제화를 통한 국력의 축적은 일본으로 하여금 대륙에 대한 관심보다도 해양 중심적 전략을 갖게 했다. 이는 '산업국가론'으로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집착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하겠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지속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이룩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일본의 기본목표는 미·일 안보조약 및 한·미 안보조약을 기반으로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안전보장이 관계 당사국인 6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유지되어야 하며(2+4의 구도), 일본 단독의 여하한 행동은 자제하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일·러관계나, 일·중관계에 있어서 경제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에 관한 어떤 교섭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한국 및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발사 및 재래식 군사력 증강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

는 남한의 핵개발을 자극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에게 IAEA 사찰 및 남북한 상호사찰 수락을 촉구하였다.¹²⁰⁾

일본정부는 자국의 안보이익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동북아 및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미국 핵무기의 반입에 대하여는 묵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²¹⁾ 따라서 일본은 북한이 미국 핵무기 반입금지를 목표로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보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과 남북한 비핵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상호사찰에 의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²²⁾

1993년 5월 29일 실시된 북한의 '노동1호' 발사실험 성공을 계기로, 일본은 도쿄를 포함한 일본 관동(關東)지방이 노동1호의 사정권내에 들었다고 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오판하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¹²³⁾ 일본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동북아시아 역내국가간 혹은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및 군축노력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우선시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일본인들은 세계조류에 비추어 공산화통일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이루어질 한반도 통일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

120) 「동아일보」, 1992. 7. 20.

121) 豊田利幸 編, 「太平洋非核化構想」(東京: 岩波新書, 1990), pp. 61~82.

122) Koji Kakizawa, "Japan's Position on Suspect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V, No. 1 (Summer 1992), pp. 61~62.

123) 「朝日新聞」, 1993. 6. 11.

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 및 일본의 공식적인 한반도 통일 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두 개의 분단된 국가를 상대하는 편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상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 즉 남북한이 분단된 평화공존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급격한 통일과정 및 군사적으로 강력한 통일한국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다.¹²⁴⁾ 또한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인의 노력에 의해 실현될 경우에도 통일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¹²⁵⁾

(2)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한반도는 섬나라인 일본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 과거부터 대륙과 일본과의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륙으로부터 일본열도에 침입하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루트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는 시베리아로부터 樺太, 千島 列島를 경유해서 북해도를 향하여 침입하는 경우이며, 둘째로는 대만 방면으로부터 서남지역의 여러 섬을 거쳐 九州로 향하여 침공하는 경우이고, 셋째로는 한반도를 경유하는 침공이 있을 수 있다.

이상의 3개 루트 가운데 북해도 경유의 경우는 기지, 보급 및 군대증원 등 전략적 문제가 있으며 서남지역의 여러 섬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대륙국가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반도를 경유하는

124) Yukio Satoh, "Reduction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Japanese View,"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p. 104.

125) Brian Bridges,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Toward Norma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2 (Winter 1991), p. 190.

루트가 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전략상 “한반도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¹²⁶⁾

이와 관련,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북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입장은 북·일수교 교섭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수동적인 입장이 탈냉전과 함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1988. 7)과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전개로 대북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으로부터 제약요인이 완화됨에 따라 일본은 1990년 9월 가네마루 전 부총재를 대표로 한 자민당·사회당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여(1990. 9. 24~28) 일·북한 관계개선 교섭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신냉전 시기 일본이 취했던 한국 위주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1970년대 초 데탕트시기 공식화되었던 남북한 등거리외교의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북방정책은 일본이 동북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정부가 소련, 중국 및 사회주의 제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면서 북한이 일본 및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게 됨으로써,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북한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통하여 일본은 한반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외교적 노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발언

126) 1969년 11월 22일 ‘닉슨-사토 공동성명’ 제4항에서 미·일 양국은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중요하다”는 소위 ‘한국조항’에 합의하였다.

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 한국과 주변 강대국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됨으로써,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일본이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확대되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1995년 '신방위대강'을 수립하였다. 일본 군사력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인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신방위대강'은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기본적 방위력구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① 미·일 안보체계의 유지·강화, ②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③ 조기경보기(AWACS) 4대 도입 등 질적인 전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또 국제 냉전구조의 붕괴에 따라 옛 소련의 위협을 삭제한 반면 한반도를 최대 위협요인으로 규정하였다.

1996년에는 21세기를 향한 미·일 양국의 군사동맹체계 및 일본의 대외군사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천명하였다. 일본은 1997년 9월 23일 1978년 이후 19년만에 미·일 양국의 외무·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3) 회의를 뉴욕에서 개최, 일본의 역대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규정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미·일 신안보동맹의 광역화와 군사협력이 확대되고 일본주변 유사시(한반도 및 대만사태시) 일본은 주일미군의 지원을 명분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¹²⁷⁾

활동내용도 다양하다. 전투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이 망라돼 있다. 특히 미군에 대한 탄약·무기수송과 신체

127)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활동을 대폭 강화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3개 법안이 1999년 4월 27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朝日新聞』, 1999. 4. 28.

방어를 위한 무기 사용을 허용했다. 헌법상 금지된 무력행사의 ‘뒷문’을 열어놓았다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동북아의 안보질서에 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은 이 법을 중국 포위망 구축작업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동북아지역에서 미·일 양국간 군사협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변 유사의 주대상이 한반도라는 점에서 한반도에 중대한 이해가 걸린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작전의 효율적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필요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안보·군사지원 역할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억제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¹²⁸⁾

그러나 미국의 일본중시 안보전략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상대적 이완 가능성, 일본의 대한반도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가능성, 주변 4국의 블록화(미·일, 중·러)현상을 촉진시켜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이 경색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신방위지침’은 기본적으로 냉전후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미·일 군사협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안보역할 가속화와 군사대국화를 초래할 우려를 갖게 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군사질서의 재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일본을 신안보체제의 틀 속에서 관리·조정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향후 동 체제를 안보대국화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¹²⁹⁾

128) 한국정부는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每日新聞』, 1997. 7. 7.

129)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 및 억제력을 확보하는 데 한국 및 통일한국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일본의 입장

(1) 일·북 관계개선 문제

북·미 베를린 협상타결(1999. 9. 12) 이후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오부치 일본총리도 9월 18일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취해 온 일본의 대북제재조치(대북 식량제공 중단, 전세기운항 중단, 국교정상화교섭 동결)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¹³⁰⁾

그러나 북·미 베를린 협상타결 이후에도 북·일관계 개선에 장애요인들이 남아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표 1> 북·미 베를린 협상타결 이후 북·일 관계개선 쟁점

	북한	일본
식민지배기간 처리문제	-북·일은 교전관계 -청구권 외에 교전관계에 다른 배상권도 존재	-교전관계 부인 -배상권은 없고 청구 권만 있음
해방(45년) 이후 보상문제	-일본의 6·25 가담 등 해방 이후 보상 필요	-보상 불가 -6·25시 지원은 유엔 결의에 따른 정당한 행동
미사일·핵문제	-북·미간 문제로 일본과 무 관	-대량살상무기 해결이 수교 전제조건
북송 일본인처 문제	-수교교섭 원만히 진행시 공정검토	-자유 왕래·연락 허용
남북 일본인 송환문제	-한국이 날조한 것 -북·일 수교와 무관	-사실관계 조사 -송환 및 사과·재발 방지

130) 『朝日新聞』, 1999. 9. 19.

북·일 수교교섭은 1990년 11월과 12월 3회에 걸친 예비회담과 1991년 1월과 1992년 11월까지 8차에 걸친 회담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 북·일 수교교섭 과정에서 노정된 현안은 북한핵문제, 보상권과 청구권문제, 이은혜문제 등이었다.

일본 연립여당(사회·자민·사키가케) 방문단이 1995년 3월 30일 북한노동당과 북·일 수교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1990년 자민·사회·노동당에 의한 3당 공동선언에 의해 북·일 수교교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3당 공동선언(1990. 9. 28)에 명기한 “일본이 한국과만 국교를 맺음으로써 북한이 본 피해도 보상한다”는 이른바 전후보상문제는 의제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상권·청구권 문제는 북·일수교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다.

1996년 9월에 한국에서 발생한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북·일관계에 진전이 없었다. 잠수함사건이 해결된 후 북·일간 교섭이 재개되었지만, 1997년에 들어와서 북·일관계는 황장엽 노동당비서의 망명사건, 일본인 납치의혹사건, 각성제 밀수사건, 노동1호 미사일 재배치 및 추가배치사건 등으로 다시 교착상태에 봉착하였다.¹³¹⁾

131) 북·일 주요 현안을 교섭하기 위하여 황장엽 노동당비서가 일본을 방문(1997. 1. 30~2. 11)하였으나, 그가 귀국도중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망명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냉각되었고, 일·북관계도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 1997년 3월 12일에는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공작원 안명진이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대담에서 평양의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요코다 메구미를 목격(1988. 10)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일본열도가 발각 뒤 집히는 소동이 일어났다. 1997년 4월 9일에는 북한화물선 ‘지성2호’가 각성제(70kg, 약 100억 달러)를 미야기현 호소시마(細島)항으로 밀반입시키려다 적발되었다. 4월 11일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북한이 일본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노동1호(중거리탄도미사일, 사정거리 1300km)를 동해안에 3기 재배치하였고, 추가로 7기를 더 배치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북·일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1996년 3월 이래 비 공식 실무회담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1997년 8월 21일에는 베이징에서 심의관급 실무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앞에서 열거한 주요 현안이 제기되었는데, 각성제 의혹사건, 식량지원문제, 일본인처방일문제 등에 대해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본인 납치사건은 계속 협의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의하여, 베이징에서 1997년 9월 9일 열린 북·일 적십자사 연락협의회에서는 북한에 있는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997년 11월 8일, 북한에 있는 일본인처(1,831명) 중 제1진 15명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제2진 12명이 1998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일본에 도착하였다.¹³²⁾

「납치의혹 일본인 구원 의원연맹」의 나카야마 마사키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 의원단이 사태 타개를 위해 1998년 3월 북한을 방문하였다. 나카야마 의원은 ‘요도호’ 납치범 귀국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납치 사건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의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귀국 직후 자민당내 비판에 부딪쳐 이 제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97년 11월 11일 일본의 자민, 사민, 사키가케 등 여당 대표단으로는 2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입국하여 일본인 납치 의혹에

132) 일본 각료회의는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계기로 1997년 10월 9일 2,700만 달러의 대북한 식량지원을 결정하였다. 당초 일본내 반복한 정서를 완화시키고 수교교섭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일본인처 귀향을 일본내 반복한 분위기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못하였다. 일본은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600만 달러의 간접적인 식량원조에 그치게 되고, 직접적인 원조는 거부하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대한 진상규명과 일본인처 후속방문 문제에 대하여 거론하였다.

1998년 3월 28일 나카야마 마사아키(中山正暉) 전 우정상을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 방북단이 평양에 도착하여 김용순 노동당비서, 김양건 부부장 등과 북한공작원의 일본인 납치의혹과 보상방안 등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¹³³⁾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전역미사일방위'(TMD)시스템을 연구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개선비용 291억엔을 2000년 방위예산으로 배정했다.¹³⁴⁾

일본인 납치의혹사건과 1999년 3월 북한공작선의 일본영해침투사건 그리고 7월과 8월의 북한미사일 시험 재발사 움직임 등으로 일본과 북한관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였다. 북한은 일본에 대해 '접근과 미사일 협박'이라는 이중전략을 전개하고 있고,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화과 억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¹³⁵⁾

북한과 미국은 1999년 9월 12일 베를린 고위급회담에서 대포동 미사일 발사 유예와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지원을 맞바꾸는 타협안에 합의했다.¹³⁶⁾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최대 위협요인으로 작용

133) 일본은 당시(1997. 11) 일본 방북대표단이 왔을 때에 쌀지원과 일·북정상화 교섭을 약속할 예정이었지만 그 계획이 수정되었다. 그 이유는 일본외무성이 1997년 말부터 국교정상화 교섭 무조건재개 방침을 바꾸어 납치의혹의 진전이 없는 한 교섭은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重村智計, 「日·北國交正常化の展望」,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관계 전망」(민족통일연구원 주최 한·일워크숍 자료집, 1998. 8. 28), p. 4.

134) 「朝日新聞」, 1999. 8. 25.

135) 배정호, “북·일관계의 변천과 북·일수교전망,” p. 17.

136) 베를린 합의 성공요인은 한마디로 한국의 포용정책을 한·미·일 3국이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이다. 합의의 바탕은 한국정부의 햇

하였던 북한 미사일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북·미간 대북 포괄협상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999년 6월 미·북 베이징 고위급회담 이후 계속되어 온 북한의 미사일 위기는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사일 발사문제의 타결은 북·일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가장 예민하게 대처해 온 일본은 베를린 회담 결과에 한숨을 돌리면서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광명성 미사일 발사 이후 취했던 식량지원중단, 수교회담중단, 전세기운항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수교교섭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¹³⁷⁾

평양을 방문한 일본의 초당파 의원대표단이 북한 노동당과 북·일수교협상의 연내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1992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이 다시 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맞게 되었다.¹³⁸⁾ 북한과 일본간 대화의 시작은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경색됐던 관계를 풀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과 일본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안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한 것은 양측 모두에게 관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종래의 입장을 굽힌 북한의 변화이다. 북

별정책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의 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금창리협상은 사실 미·북간의 몫이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햇볕아닌 바람이었다면 북한이 미국만 믿고 벼랑끝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다. 미사일 위기 해결에 북한의 군사적인 고려가 있었다면 그것은 서해해전의 패배가 아니라 극동미군의 공격능력일 것이다. 동시에 미국도 가능한 한 최대의 당근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137)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외상은 북·일전세기 운항의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朝日新聞』, 1999. 10. 7.

138) 『讀賣新聞』, 1999. 12. 3

한은 이 합의에서 수교협상의 주요 장애였던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해 비록 ‘행방불명자 차원’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일본인 납치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잡아떼던 과거의 주장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수교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식량지원의 재개도 적십자사 차원의 인도적인 지원으로 양보했다. 북한이 일본과 수교를 서두르는 이유는 경제적 동인 때문이다.

일본측으로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적 위협을 해소한다는 현실적인 이해와 함께 과거사의 정리 차원에서도 북·일관계의 정상화는 필요할 것이다. 최근 일본은 한국·북한, 미국·북한이 여러 채널로 협상할 때마다 소외감을 느껴왔다.

교섭재개 합의의 이면에는 국제정세의 변화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지나치게 대북 강경책을 편다는 견제와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유보하는 대신 경제제재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페리 구상에 따른 대타협을 하면서 일본의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¹³⁹⁾

수교협상이 재개된다고 하여 북·일관계가 바로 정상화된다고 보기는 물론 어렵다. 일본인 납치의혹과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 전후 보상문제 등 넘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보장도 큰 걸림돌이다.

일본측은 북·일 수교교섭을 “한·일 기본조약에서 정한 틀과 적합성 내에서 진행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일 수교교섭에서 보상문제를 재산권·청구권 문제로 취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139) 페리보고서의 일본관련 부분에는 일·북 수교교섭 재개에 따른 청구권 자금문제 등 대북포괄정책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1999. 9. 15.

있다.¹⁴⁰⁾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돈을 얻어내는 수준에서 만족하느냐이다. 사실 ‘청구권방식’이나 ‘보상방식’이냐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한국은 북·일수교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은 일본이 국교정상화 이전에 경제협력·배상은 하지 않을 것과 남북대화 및 교류의 진전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 대북경제협력이라도 한국에 배당한 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했고, 미국은 전후 45년간에 대한 보상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모든 것도 일본의 대북 압력수단으로서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¹⁴¹⁾

북·일수교시 보상액수는 양측간에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반발을 추스리면서 한·일기본조약 당시 한국에 제공한 무상 3억 달러, 유상차관(엔차관) 2억 달러의 연체이자를 감안한 액수(약 40억 달러 상당)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최소한 100억 달러 이상을 기대하고 있어서 양측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이 북한과 수교시 제공할 ODA는 약 40억 달러에서 약 100억 달러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²⁾

일본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문제는 바로 북한 핵·미사일의

140) 1991년 1월 25일 일본정부는 교섭에 임하는 4가지의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그것은 첫째, 교섭이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둘째, 북·일국교정상화가 한·일 우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셋째, 일본의 식민지통치 36년간에 대해서는 청구권문제로서 성실히 대처하나 전후 45년에 대한 보상은 수용하지 않는다. 넷째, 북한의 핵사찰 수용은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朝日新聞』, 1991. 1. 26.

141) 『讀賣新聞』, 1990. 10. 5.

142) 김영춘, 「일본의 대외 원조정책 연구: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한 관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44.

혹해소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의식하여 1999년 12월 2일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 관방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를 포함한 현안들이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협상을 추진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으로 믿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했다.¹⁴³⁾ 결국 전에 없이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만 일본정부가 핵·미사일 문제를 미·북 협상에 맡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 회담의 향배는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언론들은 “의원 방북단이 미사일 재발사 금지 등 일본정부가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문제를 묵살했다”며 비판적으로 전망했다.¹⁴⁴⁾

따라서 수교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당분간 양국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앞에서 본 현안들 이외에도 북한은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최대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북 관계는 미·북 관계의 틀을 넘어서기 힘들다. 일·북 관계는 질보다 양에서 대화를 축적하며, 미·북 관계를 쫓아가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2)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

핵문제와 관련, 일본은 핵 피폭 경험 때문에 비핵3원칙을 표명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성실히 받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안보, 동북아 안정 및 대미관계를 고려하여 제3세계에서 핵무기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북한도 핵시설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고 남북상호핵사찰을 수용함으로써 한반도가 비핵지대가 되는 것을 바

143) 「讀賣新聞」, 1999. 12. 2.

144) 「産経新聞」, 1999. 12. 3; 「讀賣新聞」, 1999. 12. 3.

라고 있다.¹⁴⁵⁾ 또한 일본은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접근이 시도될 경우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핵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군축문제와 관련, 일본은 한반도통일이 현재의 군사력을 유지한 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합의와 주변국간의 다자간 안보협의를 통해 남북한의 핵 및 생화학 병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총병력을 감축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1992년판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의 노동1호 지대지 미사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등 북한과 중국이 극동지역의 중요한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등장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양국과 미·일·중·러 간의 「2+4」회담 등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한반도의 군비통제 등 안보문제에서도 발언권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3)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문제

일본은 남북한간 교류협력 확대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자국의 대북한 투자확대 등 대북한 경제진출 기회를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진전될 경우, 일·북한 수교협상도 진전될 것으로 보고 환영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하부구조 미비로 대북한 경제진출에 소극적인 일본은 한국이 북한과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하부구조 건설 및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경우 일본의 대북한 진

145) 이즈미 하지메, 「일본과 한반도: 동북아 핵비확산구상」, 『동북아 안보협력 문제점 및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3), pp. 95~102.

출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도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이러한 국면을 실제 맞이할 시기는 그리 멀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북·일 경제교류의 추진은 역시 민간 기업, 그 가운데서도 종합상사가 주축이 되어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일부 최종소비재와 저급부품의 생산기지로서 북한을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역시 국교정상화 교섭시 청구된 형식이든 원조형식이든 양국간 정치협상시 이해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해 인접지방들은 환일본해 경제권 개발구상을 마련, 북한의 개혁·개방을 크게 기대해 온 만큼, 지방과의 교류확대, 산업기술 협력, 대북 직접진출 등을 통해 지역진흥과 지방국제화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려 할 것이다. 일본이 1차적으로 경제특구설치, 두만강유역개발구상¹⁴⁶⁾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중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에서의 수출증대, 외화획득으로 대북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장기적으로는 동 지역 진출에 의해 금후 ASEAN 등에서의 임금비용 증가에 대비, 새로운 저급생산기지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남북한 및 일·북한 교류에 대한 지지 입장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일본의 대북경제정책의 실행가능성은 한·미·일 공조체제에 의해 크게 제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9년 9월 12일 베를린에서 미·북회담이 타결됨으로써 일본 초당파 의원 방북단과 북한 노동당은 1999년 12월 3일 평양에서

146) UNDP의 시사에 의하면 20년간 약 300억 달러가 소요될 본 계획은 환일본해경제권의 상징적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김규륜,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2), p. 45.

1992년 11월 이래 중단된 수교교섭 조기 재개와 교류·왕래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¹⁴⁷⁾ 일본은 적극적으로 식량지원 등 대북한 경제협력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와 관련, 일본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및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이 분단된 현상을 대외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보장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¹⁴⁸⁾

일본은 남북협상 진척상황과 남북한 및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보장장치로서 「2+4」 구도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구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발언권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1996년 4월 북한의 정전협정의 무력화조치에 따른 한반도의 불안정을 극복하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 4자회담을 제안하자, 일본은 이 회담을 지지하면서도 자국의 참여가 배제된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

147) 「讀賣新聞」, 1999. 12. 3.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 재개를 위해 7일째 대북제재조치인 식량지원 중지와 국교정상화 교섭 동결해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讀賣新聞」이 12월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후 취한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는 이미 해제된 경수로 분담금 지원 중지와 전세기 운항 동결 조치를 포함해 모두 풀리게 됐다.

148) 일본의 전외무차관 하마다 다쿠치로(濱田卓二郎)는 1992년 3월 9일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2+4」 제의에 대응하여 일본과 미·중·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남북한이 종속적으로 참여하는 한반도문제 토의를 위한 「4+2」 회담을 제의하였는 바, 이는 한반도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朝日新聞」, 1992. 3. 10.

각하였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6자선언 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98년 2월 11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회담석상에서 밝힌 김대중 차기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6개국 공동선언’ 구상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내심 무척 반기는 분위기였다.¹⁴⁹⁾

오부치 일본총리는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 문제를 제기했다. 1998년 9월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그는 6자회담을 제안했다. 왜 이 시점에서 일본이 이런 제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으로서는 6자회담이 실현되면 종래와 같은 미·중을 통한 간접적인 의사전달이나 영향력 행사시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북한과 교섭하며 정책 결정 후가 아닌 결정 과정 중에서 일본의 주장을 관철시킬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미·중의 독주를 견제하며 남북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일·북한간에 정부 고위급 차원의 대화의 장이 전무한 상태이며 그러한 상황이 상당한 기간 계속되리라는 전망에서 6자회담을 지향한 움직임은 일본 외교 이익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자회담을 6자로 확대 운영한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없다. 일본 자체도 그런 기구 창설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4자회담의 원래의 취지와 존재 이유로 보아 일본과 러시아의 참가를 정당화하기는 곤란하다. 미·중·남북한이 그러한 안에 찬성하리

149)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무 정무차관은 6자선언 구상이 알려진 1998년 2월 12일,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나타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남북대화에 도움이 된다면 6개국 공동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라고는 상정하기 힘들다. 한국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당사자 원칙’에서 더욱 이탈하게 될 것이며 한국문제를 더욱 국제화하게 돼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남북한 당사자 해결을 선호하고 있는 한국이 4자회담의 확대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도 맹렬한 반대를 할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존 4자회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로 일·러를 포함한 정부 고위급회담의 장을 마련하여 한반도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시아 전역의 평화와 안정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6자가 각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일본·러시아 뿐만 아니라 미·중·북한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문제

일본은 최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다양한 역내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쌍무적 안보관계를 보완하는 다자간 안보대화화 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일본이 다자간 안보에 적극성을 띠게 된 이유는 냉전종식으로 역내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미·일 안보관계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장차 아시아에서 철수하거나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등장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이나 역내 군비경쟁을 통한 돌발사태 발생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역내국가들간에 다자안보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자국 역시 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¹⁵⁰⁾

150) Hisayoshi Ina, *A New Multilateral Approach for the Pacific: Beyond the Bilateral Security Network* (The Johns Hopkins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제안한 것은 1990년부터였다. 특히 1991년 7월 나카야마 외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ASEAN-PMC의 실무자급 회의에서 아·태지역의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제의를 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태지역에서 정부간에 다자안보기구의 구상이 논의될 때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입지조건을 마련하고 PKO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합법적인 메카니즘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¹⁵¹⁾ 그러나 이 제안은 사전협의를 없었기 때문에 ASEAN 국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한·미 등이 유보 내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채택되지 않았다.

일본은 그 후에도 수차례 걸쳐 아·태지역의 정치·안보대화를 제의하여 오다가, 미야자와 수상이 1993년 1월 ASEAN 순방길에서 '미야자와 독트린'¹⁵²⁾을 공식적으로 표방하였다.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고 일본과 ASEAN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의 독트린은 첫째,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국가들간 정치·안보대화의 촉진 및 지역안보에 대한 장기적 비전의 개발, 둘째, 아·태지역 경제의 개방성 제고 및 역동적 경제성장 촉진, 셋째, 민주화 촉진 및 개발과 환경보존의 동시적 추구, 넷째, 인도차이나의 평화와 번영을 겨냥한 일본과 ASEAN 국가들간 협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미야자와는 한반도의 화해를 위한 대화를 지원하기 위

Foreign Policy Institute, 1993), pp. 10~15; Gerald L. Curtis, "Meeting the Challenge of Japan in Asia," in Gerald L. Curtis (e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sia* (N.Y.: W.W.Norton & Co., 1994), pp. 216, 252.

151) 송영선, "亞·太地域의 多者安協協力體制는 可能한가?" 「오늘의 군사운영 분석」, 제9권, 제2호 (1992. 12), p. 21.

152) 외교안보연구원, "미야자와 독트린과 일본의 아태지역 정책방향," 「主要國際問題分析」, 1993. 2. 17, pp. 7~10.

해서는 일본, 미국, 중국 및 러시아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하여 현재 일본, 미국 및 한국이 협력하고 있는 수준은 시작단계라고 말하면서 미·일간 정치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미야자와 독트린은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 유대를 안보협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ASEAN-PMC를 모델로 한 것인데, APEC을 선호하는 미국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¹⁵³⁾

1994년 7월에 무토 외상은 ARF의 창설을 지지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의 정책에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정치적 회담이 중요하며 정치 및 안보문제에 관한 아태 군사협력은 전반적인 다자간 지역회담체제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¹⁵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ARF는 아태지역 최초의 정부차원 다자간 안보협력체인데, 일본은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냉전이후 일본 안보정책의 골간을 규정하는 ‘방위계획대강’ 개정안이 1995년 11월 28일 확정되었는데, 이 안에서 다각적 안보개념이 도입되었다.¹⁵⁵⁾ 즉 일본은 UN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비롯하여 동북아 및 ASEAN, ARF 등의 회원국과 다각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방위청 고위 간부는 “탈냉전시대의 국방정책으로는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으며,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과의 신뢰조성이 일본 방위정책의 또 하나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¹⁵⁶⁾

153) 여인곤 등,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58.

154) 마코토 가와나고, “지역안보와 일본,” 「동북아의 안보협력 문제점 및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3), p. 93.

155) 「朝日新聞」, 1995. 11. 29.

한편 일본은 동북아지역의 민간차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NEACD (North 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동북아 협력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동북아 NEACD(1996. 1. 8~10)에서 세계 군사력의 30%가 집중된 동북아지역에는 다자안보 협력의 부재, 한반도 분단 등 불안정 요소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안보균형 구축의 기초가 될 상호안심조치(MRM) 등을 개발·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은 향후 10년간 국제적 MRM 분야에 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자위대의 PKO참여 등을 통하여 국제적 역할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¹⁵⁷⁾

중국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중국이 분명히 이 지역의 잠재적 불안요인이므로 이러한 불안요인을 다자간 틀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이 다자협력의 틀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는 기능할 수 없으며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동북아 평화체제의 기반조성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의 준비작업으로 중국, 러시아 및 한국에 대하여 양국간의 상호투명성 확보를 높이는 군사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¹⁵⁸⁾

결국 일본은 전방위형태의 방위전략 아래 장기적인 다자안보협력 정책을 제시하면서 주변국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역할 증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보문제와 관련, 일본은 미·일동맹의 확고한 기반위에서 ARF 같은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육성시켜 가는 것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¹⁵⁹⁾

156) 『讀賣新聞』, 1996. 4. 27; 『世界日報』, 1996. 4. 28.

157) 전동진, 『한·일 안보협력 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65~66.

158) 『朝日新聞』, 1999. 5. 4.

159) 前田哲南, 竹田いさみ, “アツア 太平洋に多國間安保は可能か,” 『世界』,

동북아지역과 관련해서는 NEAC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바 없다.

(6) 주한미군 문제

미군의 한국주둔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가상위협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역으로 일본의 역할증대에 따른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¹⁶⁰⁾ 이와 관련, 1992년 11월 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정상은 “클린턴 행정부 아래서도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계속적인 역할이 이 지역 안정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미국의 정책이 새로운 행정부 아래서도 변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으로써 한반도문제에서의 미국의 지속적인 안정적 역할 수행을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¹⁶¹⁾

일본은 통일 이행기에 북한 김정일체제의 붕괴로 야기될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 위협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을 중요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민주적 통일이행이 탄생된 이후에도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군이 당분간 주둔하여 지역안정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1996. 7), p. 48; 일본은 유럽의 OSCE형이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아태지역에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OECD 메카니즘을 그대로 아태지역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160) Yukio Satoh, “Reduction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Japanese View,”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p. 110.

161) 「朝日新聞」, 1992. 11. 9.

4. 러시아

가. 러시아의 대한민국 안보정책 기초

1991년 말의 소련 붕괴이후 출범한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그 동안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을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이데올로기 중심이 아닌 지정학적 이해 중심의 외교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의 수동적인 외교목표는 최근 적극적인 외교목표로 수정되었다. 1997년 12월 17일 열친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연방 안보청사진'¹⁶²⁾에 의하면, 러시아는 현 국제상황이 다수 국가와 통합지향적인 기구들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치, 경제, 금융, 정보 과정의 다변적 통제 메카니즘의 발전으로 다극세계 형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 단계에서는 세계정치의 주요 문제들을 군사적 해결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에 기초된 국제관계를 조성하려는 시도들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문제 해결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된 반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분야에서 자국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다수 국가들의 희망은 증가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발전되고 있는 다극세계의 영향력 있는 일강국으로서 지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의 수행을 외교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의 4가지를 중시하고 있다. ① 「독립국가연합」(CIS) 구성국가들의 통합을 위한 연합체 형성, ② 경제적, 군사

162) "Russian National Security Blueprint,"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wnc.fedworld.gov/cgi-bin/retrieve?, 6 July 1999.

적 강대국들과의 동등한 동반자관계 발전, ③ 국제범죄와 테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 ④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적 정치, 경제 기구들의 강화, 특히 유엔안보리의 강화.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 정세와 관련, 러시아는 상이한 국가간의 정치적, 전략적, 경제적 제반관계가 상호 의존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국가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역내 경제협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지역국가들의 안보정책에서 군사무력적 요소의 역할이 낮아지고 있으며 지역의 군사-정치적 정세가 더욱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⁶³⁾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냉전시기에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형성되었던 군사동맹체제의 유지, 미 군사력의 전진 배치, 남북한간의 상호불신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및 역내의 영토분쟁 가능성 등과 같은 위기와 갈등의 잠재적 위협요인들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⁴⁾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역내에서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무기수출 확대 및 아·태국가로서의 위상확립 등을 동북아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와 관련, 1990년 9월 한·소 수교이후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기조는 한국 중심의 남북한 등거리외교이었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대러 투자, 1993년 8월 한국의 경협차관 제공 중단, 북

163) M. L. 티타렌코, 「동북아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안보 개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와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공동주최 제9차 한·러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8. 10. 22~23), p. 2; Alexander Z. Zhebi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Russia," 「지역연구논총」, 제6집 (1994), p. 158; Alexander Kislov, "Russia and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XXIII, No. 4 (Winter 1992), pp. 535~536.

164) 티타렌코, 「동북아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안보 개념」, pp. 2~5.

한 핵문제 해결과정과 4차회담에서의 소외 등으로 1994년 후반이후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기조는 균형된 남북한 등거리외교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러시아의 대한반도 안보정책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1) 한반도 안정유지

한반도에서는 남한의 대북 금강산 관광과 경수로 건설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간에 냉전시대의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자국이 지리적으로 단지 한 시간 반의 비행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이 안보면에서 특별한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있다.¹⁶⁵⁾ 한반도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극단적인 남북한간의 적대관계와 화해불능 때문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교차로 한반도는 잠재적으로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이라는 점이 러시아측의 인식이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이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의 위기와는 바로 직결되지 않는 한반도에서 일정 수준의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⁶⁶⁾

165) Gueorgui F. Kounadze, "Russia's Foreign Policy in Evolving World and Prospects of Russia-Korea Relationship," 『외교』, 제31호 (1994. 9), p. 164.

166) V. P. 뜨까첸코,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공동주최 제9차 한·러 학술회

여하간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자국의 국내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제반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첫째, 구소련 정부는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였으나 냉전종식 이후 러시아 정부는 주한미군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¹⁶⁷⁾ 둘째, 북한의 돌발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던 1961년의 북·소 동맹조약, 즉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1996년 9월 10일 폐기하였다. 셋째, 북한의 상황은 극심한 경제 및 식량위기에 돌입하고 김정일의 당총비서 및 국방위원장 취임이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남북한과의 균형관계 발전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한반도 불안정성에 대해 같이 우려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의를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섯째,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 6자회담이나 8자회담 등 다자간 국제회의의 개최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는 남북한간의 적대감과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정을 자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국내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로 인한 동북아 세력균형의 급작스런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 이전까지는 남북한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

의 발표논문, 1998. 10. 22~23), pp. 1, 5.

167) 파노프 전 주한 러시아대사는 미 군사주간지 Defence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는 바, 이는 러시아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용인하는 최초의 공식발언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Defence News*, January 25~31, 1993, p. 38.

단하고, 전략적 유연성과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2) 한반도 비핵화

러시아는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에 핵이 없는 상황을 국익과 연결시키고 극동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1년 11월 한국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동년 12월 남북한간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및 1992년 1월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 등 일련의 조치들을 한반도 비핵화정책에 대한 중대한 진전으로 간주하였으나,¹⁶⁸⁾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모든 상황은 구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 (KGB) 제6국과 사회주의국가들의 안보문제를 담당하던 제11국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대의 정보들을 기초로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와 핵 보유국으로서의 등장을 위하여 김정일 지도하에 핵개발에 착수하였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1990년 경 핵 기폭장치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이 사실의 은폐를 위하여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으며, 플루토늄 추출상의 문제 등 능력 부족으로 완전한 핵개발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미 수교 및 체제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카드로 핵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¹⁶⁹⁾

168)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급변이 미국의 핵무기 철수, 「탐스피리트」 훈련 연기, 미군의 감축준비 등 군사·정치상황 변화로부터 발생되었다고 평가하였다.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5 February 1992, p. 38.

169)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4 June 1994, pp. 11~12; 「한국일보」,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경우 어떠한 핵무기라도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¹⁷⁰⁾ 북한의 핵개발을 지역불안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1992년 말 모스크바 공항에서 북한으로 탈출하여 핵기술을 이전하려던 30명 이상의 러시아 과학자들을 체포하는 등 자국 핵과학자와 핵연료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하고 IAEA의 사찰과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수락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양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¹⁷¹⁾ 미국 등 서방과 공조체제¹⁷²⁾를 유지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불안정과 긴장을 우려하여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견지하여 왔던 러시아는 1994년 3월 24일 외무부 공식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엔 및 IAEA가 참여하는 '8자회담'을 제의한다고 발표하였다.¹⁷³⁾ 러시아는 '8자회담'의 의제로서 한반도의 비핵지위 확보, 남북한의 주권과 영토보전 확인, 남북한에 대한 내정불간섭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북한 핵문제에 균형된 입장을 취함으로써 북한의 우발적인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

1992. 7. 30.

170) 트카첸코,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한양대 중소기업연구소 세미나, 1993. 5. 24); 「주요자료 전문집」 (연합통신사, 1993. 6. 1), p. 104.

171) 「모스크바방송」, 1992. 6. 3.

172) 1992년 6월 엘친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공동성명」,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시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 긴급회담의 개최 제안, 동년 10월 엘친 대통령의 방일시 호소카와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강한 우려 표명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173)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5, 1994, p. 2;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9 March 1994, p. 11.

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994년 10월 21일 미·북간 제네바 합의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는 러시아의 한반도 비핵화정책과 정치적 타결 모색이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한 대한반도 안보정책의 하나로 견지하고 있다.

(3)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

러시아는 현재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의 정의롭고,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내 한반도문제 관련 다수의 고위관료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경제위기에 처해 있으나 단기적으로 동구에서와 같은 근본적인 대내적 정치변화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근거로서 약 20여명의 김일성 친인척들이 김정일체제의 안전을 위해 당·정·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북한에는 체제 저항세력이 없다는 점, 북한은 ‘잔인할 정도로’ 통제된 사회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통일을 먼 장래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¹⁷⁴⁾ 이와 같은 배경과 한반도 안정유지라는 차원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남

174) “이그나텐코 러시아 부총리 인터뷰,” 『조선일보』, 1996. 4. 15; G. F. Kounadze, “Russia’s Foreign Policy in Evolving World and Prospects of Russia-Korea Relationship,” p. 165; Vladimir Miasnikov, “Russia in the New Concert of East Asian Powers,” a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New Asian-Pacific Era and Korea”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0~21, 1992, Seoul, Korea, p. 18; Alexander Zhebin, “North Korea after Kim Il-Sung: Hard Choic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VII, No. 1 (Summer 1995), pp. 213, 227 등 참조.

북대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남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준비를 위하여 북한과 대화를 지속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통일 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아태지역의 정치·경제적 강국으로 부상하더라도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되는 경우에는 극동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반도통일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⁷⁵⁾ 한반도 통일방식과 관련,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남북한 직접 대화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있으나, 평화적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의 일부에서는 경제력이 우세한 한국 주도의 독일식 흡수통일 방식을 현재 한반도통일의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다.¹⁷⁶⁾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독일식 흡수통일의 경우 한국이 현재의 경제역량과 성장률로는 흡수통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남북한 주민간의 문화적 이질성이 경제적 투쟁관계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북한 보수세력들의 무장계열라거점이 형성되어 남북한간 유혈사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경고하고 있다.¹⁷⁷⁾ 반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의 미아시니코프 같은 학자는 한반도통일이 무력에 의한 베트남식 통일이나 독일식 흡수통일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175) Vadim P. Tkachenko,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Korea and the Russian Position,"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pp. 7, 11 참조.

176) *Rossiyskaya Gazeta*, 1991. 12. 27.

177) 김명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한국학 전문가 30명이 본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환경 전망," 「통일한국」, 통권 제120호 (1993. 12), p. 80.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⁷⁸⁾ 이러한 견해는 그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한반도통일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한반도 통일문제가 국제적으로 본격 논의되는 경우 러시아 정부는 국익 확대를 위해 이에 적극 개입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로가초프 옐친 대통령 특사는 1992년 3월 13일 방일중 「일본경제신문」과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이 실현될 때까지는 남북한의 자주적인 행동에 맡기겠으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다국간 협의의 장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1) 남북 관계개선 문제

러시아는 남북한 불신과 대결의 원인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호 상반된 정치·사상적 체제, 미국의 일방적 정책 등에서 찾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남북한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긴장고조시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남북한 당사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면서도 한반도문제 해결에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178) V. Miasnikov, "Russia in the New Concert of East Asian Powers," p. 18.

먼저 남북한간 상호불신 및 대결의 원인문제와 관련, 서울과 평양은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력 및 통일 등에 관한 수많은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하나 반세기 이상을 심하게 대립하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할 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에 있다. 더욱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냉전시기에 특징적이었던 남북한간의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와 같이 한국전쟁 이래 46년간 남북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는 해방이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에 의하여 분단되었고 사회·정치 제도적으로 아주 상이한 두 개의 국가가 등장한 후 동족상잔이 벌어졌다. 둘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상이한 체제를 갖고 서로 적대적 대립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즉각 해결하기 어렵다. 셋째, 미국은 평양과의 미수교 상태에서 서울과는 군사동맹을 계속 증진하는 등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⁷⁹⁾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엘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의 서울 정상회담시 1992년 11월 20일 발표된 ‘한·러 공동성명’¹⁸⁰⁾을 통해 남북한간 대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미간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한 북한의 전면 거부로 1993년 초에 남북대화가 단절된 이후에도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남북한간의 상호 신뢰회복, 경제·문화·사회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179) “Moscow Radio Views Russia-DPRK Talks.”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wnc.fedworld.gov/cgi-bin/retrieve, March 15, 1999; 「러시아 방송」, 1999. 7. 16, 8. 14.

180) 외무부, 「러시아연방 개황」, (1995. 9), pp. 189~194.

의 재개와 남북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고 있다.¹⁸¹⁾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이를 중재하기 위한 카터 전 미대통령의 1994년 6월 평양 방문시 김일성은 김영삼 대통령과 만날 것을 제의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즉각 수용하여 판문점에서 남북대표들이 평양에서 7월 25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남북정상회담은 해방이후 최초의 남북한간 정상회담이라는 면에서 국내외의 관심이 지대하였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었다. 이 당시 러시아는 적대심으로 살아온 50년간 남북 지도자들은 많은 난제를 안고 있기 마련인데 그 어떠한 중재도 없이 남북정상들이 회담 석상에 마주 앉으려 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사실이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그 회담이 핵문제뿐만 아니라 쌍무관계와 관련된 일괄 문제들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유리한 배경을 마련해 주어 통일이라는 과제의 해결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¹⁸²⁾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현재에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러시아는 “남한에서 신 정부의 출범이 북한을 인간적인 재앙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남북한 대화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러시아는 긴장완화에 목표를 둔 어떠한 과정도 분명히 지원할 것”¹⁸³⁾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

181)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김영삼-엘친 대통령간의 ‘한·러 공동성명’(1994. 6. 2), 김대중-엘친 대통령간의 ‘한·러 공동성명’(1999. 5. 28) 등 참조.

182) 「모스크바방송」, 1994. 6. 24, 6. 25.

183) G. Toloraya, “Russian Policy on Korean Peninsula,” 「亞太 Focus」, 제8집 (1998. 6), p. 153.

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1999년 5월 28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시 발표된 ‘한·러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하게 할 남북한간 접촉과 생산적 대화를 촉진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2월 3일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명의로 남한 각계 인사에게 대화를 제의하는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평양이 제안한 많은 조치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선포한 이북과의 접근정책에 부합된다는 것”¹⁸⁴⁾을 지적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데무린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996년 9월 북한 잠수정의 강릉 침투사건 당시 “남북한 모두 자제심을 보여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¹⁸⁵⁾고 말한 바 있다. 1998년 12월 17일 여수항 주변에서 북한 잠수정이 격침되었을 때 러시아는 6월에 동해 연안에서 그리고 11월에는 황해에서 잠수정이 발견된 바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만약 이번 사건에 참여한 잠수정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속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유감만을 자아낼 사건”이고 “최근 서울과 평양이 접근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 때 이런 사건은 그 관계 개선을 흐리게만 할 것”¹⁸⁶⁾이라고 북한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1999년 6월 발생한 연평해전과 관련, 러시아 일간지 「브레미야」지는 6월 11일 “남북대화에 부담감을 느낀 북한이 판을 깨기 위해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⁸⁷⁾고 보도하

184) 「러시아방송」, 1999. 6. 30.

185) 「조선일보」, 1996. 9. 25.

186) 「러시아방송」, 1998. 12. 18.

였고, 「이즈베스티야」지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교활한 장난’이라고 규정지었다.¹⁸⁸⁾ 그러나 러시아 외무성은 6월 15일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것을 논할 필요 없이 우리는 사건에 유감을 표시하고 양측에 자제하며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¹⁸⁹⁾을 촉구함으로써 남북한 어느 일방에 편들기를 피하였다. 한 가지 주목을 끄는 것은 러시아는 이 당시 남북한간의 군사적 충돌이 열전으로 확대되는 경우 미국의 관여 가능성을 우려하였다는 점이다. 즉 “남과 북이 형식상 아직 전시상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긴장을 가열시킨다면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지구촌에서 또 하나의 열전이 터질 것이고 남북한관계는 코소보 경우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이 유고슬라비아 시나리오를 한반도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¹⁹⁰⁾이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북한이 서해에 있는 남한과의 분계선, 즉 남한의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기로 9월 2일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은 남북간의 국경협정문제를 상호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남한과 북한에 각각 호소하였다.¹⁹¹⁾ 결국 러시아는 남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남한이나 북한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긴장의 발원지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한반도문제가 동북아 불안정의 잠재적 근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

187) 「조선일보」, 1999. 6. 14.

188) 「중앙일보」, 1999. 6. 16.

189) “Russia Urges Restraint Between Korea,” *Russia Today*, www.russiatoday.com/news, 1999. 6. 22.

190) 「러시아방송」, 1999. 6. 15.

191) 「러시아방송」, 1999. 9. 3.

정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아파나시예프 대사는 현재의 “남북한관계가 대화와 경제접촉을 위한 틀의 확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가 “남북한간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¹⁹²⁾이라고 남북대화에서의 중개자 역할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2) 북·미, 북·일 관계개선 문제

러시아 정부는 김정일 정권이 당면한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라고 보고 있으며 미·북과 일·북간의 현재보다 더 나은 관계를 환영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이 대미 관계정상화를 대일 관계정상화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교차승인 아이디어는 냉전시대에 미국에 의해 발전되었고 한국과 일본에 의해 지지되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 이유를 중국과 소련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해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고 더욱이 외교관계 승인 이전에 평양이 충족시켜야 할 다수의 전제조건들을 제시하여 왔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⁹³⁾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남한의 북한 흡수를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접촉의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192) “Interviews with Ambassadors-Russia,” *The Korea Times*, January 7, 1999, p. 1.

193) Evgueni Bajanov, “Russian Perspective On A Post-Armistice Order In Korea,” www.nautilus.org/napsnet/fora/Ba_Bajanov.html, pp. 1~2.

로는 북한에서 미국의 영향력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능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조심해서 다루고 있다고 러시아측은 인식하고 있다.¹⁹⁴⁾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가 이루어지고 한국전쟁중 전사한 미군 유해가 인도되며 4자회담이 개최되는 등 미·북간의 접촉이 증대되자 러시아는 양국간에 상호 불신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견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러시아방송」은 1996년 6월부터 시작된 미군 유해발굴 작업이 진척을 보임에 따라서 이를 미·북 양국이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내다보는 중요한 보증을 내게 되었고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간 관계 개선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경수로 지원에서도 미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4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도 북한과 미국은 정성스러운 교섭을 갖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방송」은 두 나라 관계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십년간 내려오면서 워싱턴과 평양은 상호 불신을 우선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⁹⁵⁾ 또한 러시아는 “미국이 한반도 운명의 유일한 주인이 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러시아의 이해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스크바가 김일성 정권을 창출했고 재건에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했으며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⁹⁶⁾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미·북관계 접근에 부정적이었던 러시아의 태도

194) V. P. 뜨까첸코,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심,” pp. 1~2.

195) 「러시아방송」, 1998. 8. 12.

196) E. Bajanol, “Russian Perspective On A Post-Armistice Order In Korea,” p. 4.

는 1997년 말부터 변화되었고, 러시아 정부는 현재 미·북관계 정상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모이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국장은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미국 및 일본간의 더 나은 관계를 환영하다”¹⁹⁷⁾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보하는 대신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1999년 9월 12일 베를린 합의와 관련, 러시아는 미·북간의 이전 합의들은 실천에 옮겨질 것이고 동북아는 물론 아태 지역 전반 사태의 안정이 진일보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의 부분적인 대북 제재조치의 완화가 경화와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상황을 얼마간 개선시켜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 합의중인 대화를 환영하고 있고 그러한 대화는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기후를 완화할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한 조치로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¹⁹⁸⁾ 러시아는 미·북 수교는 평양이 안전과 관련된 미국의 희망사항을 준수할 때, 특히 미사일 개발계획을 완전 포기할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미·북관계가 정상화되면 평양은 한반도에서의 세력관계가 북한에 보다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남한과의 접촉 회복 및 남북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¹⁹⁹⁾

197) Leonid Moiseyev, “Russian Assessment and Policy,” a paper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Peninsula &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held by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25~26 November 1997, Seoul, Korea, p. 9.

198) 「러시아방송」, 1999. 10. 21.

199) 「러시아방송」, 1999. 9. 21; V. P. 뜨까첸코,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심,” p. 2.

일본은 대북관계에서 '억지와 대화'라는 양면정책을 내걸고 지금까지 억지 쪽에 주력해 왔으나 한·미 양국의 '포괄적 대북 접근정책' 이후 '무라야마 방북단'을 추진하는 등 대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북관계 접근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더 나은 양국간 관계를 환영한다"는 기본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미·북관계가 발전되어 일·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접근되면 러시아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 북한의 변화와 개방문제

러시아는 북한의 김정일과 당 지도부들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실패한 정치개혁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큰 폭의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개방을 지지하고 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하며 개방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접근법을 평화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개혁 가능성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하여온 트카첸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과 부과장과 물레친 「이즈베스티야」지 부주필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직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1960년대에 김정일은 몇몇 예술분야에서 개혁 지향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정치, 경제 분야에서는 개혁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다. 그는 경제발전의 문제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 했으며 강성산, 연형묵, 김달현 등의 경험에 의존해 온 편이었다. 따라서 김정일을 개혁가로 보는 데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김정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유산인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다. 설사 김정일이 약간의 자유화 조치를 원한다 할 지라도 지도부의 다른 멤버들

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과 동유럽의 경험은 개혁을 지향하는 어떠한 시도도 정권의 붕괴와 권력의 상실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들 지도부의 어느 누구도 차우세스쿠나 호네커 혹은 고르바초프와 같은 운명을 걸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정일은 개혁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순전히 외형적인, 표피적인 개혁으로 치장하고 싶어할 것이다.”²⁰⁰⁾

한편 러시아 정부는 대북한 관계에서 접근법의 3가지 주요 특징을 첫째, 전통적인 선린관계 유지, 둘째,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국제적 기준에 기초된 양국관계 발전, 셋째,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 대한 반대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양자 및 다자 대화과정에 북한의 참여를 선호하고 있다.²⁰¹⁾ 러시아 정부가 상기와 같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반대하고 양자 및 다자 대화과정 참여를 선호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개방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고립되는 경우 절망하여 핵무기 개발을 재추진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통제불능 상태로 무너져 버릴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무력충돌, 난민의 대량발생, 경제위기 등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러시아에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다.²⁰²⁾ 북한의 개방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개방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강력한 통제하의 개방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한 전문가는 1998년 9월 5일 김정일이 주석직이 아닌 국방위원장직에 취임한 것을 “북한이 개방에 나서더라도 외부의 영향력이나 체제 흔들기 공작에 쉽게 넘어갈 존재가 아님을 과시하고 강력한 통제하

200) “해외전문가 종합진단: 김정일 북한, 생존의 조건,” 『신동아』 (1994. 9), pp. 198~199.

201) Leonid Moiseyev, “Russian Assessment and Policy,” pp. 8, 10.

202) “에브게니 바자노프 러 외교아카데미 부원장(신년기고),” www.kinds.or.kr/kinds-cgi/mtsvc?SD, 1997. 1. 17.

에 개방을 취하겠다는 신호”²⁰³⁾로 평가하였다.

한 국가의 개방은 곧 그 국가의 대외관계의 확대를 의미한다. 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국가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거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나, 혹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부터 개방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물적·인적 자원을 고려할 때 경제분야가 개방을 추구하는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한 분야라고 보고 있다. 또한 러시아측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북한 주민과의 정기적인 접촉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고 그들에게 외부세계에 대한 보다 많은 접촉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른 구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²⁰⁴⁾ 또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및 북한내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이 ‘평화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설득, 접촉과 대화, 관계의 제도화, 협력, 권고를 의미한다. 러시아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와 보다 광범위한 경제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설득과 아울러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한 모든 수준에서 북한의 정부관리, 학자, 예술인 등과 지속적인 접촉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접촉과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쌍무·다자간, 정부·비정부간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데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 결과 경제, 생태계, 에너지 등 모든 비정치적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과 궁극적으로 정치, 안보, 군축 등의 문제에 대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단계에 오면 비로소 북한에 대해 그들의 행태와

203) 「중앙일보」, 1998. 9. 7.

204) Alexander Zhebin, “『평화정책』의 재개: 대북개방 유도방안” (민족통일 연구원 주최 제3회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1993. 10. 18), pp. 45~47.

정책을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필요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점진적, 선택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소련과 다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경험을 얻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나 개방 같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4)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군비통제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이 핵계획 실현에 대한 의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주변국들을 긴장상태에 묶어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무기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현재 한반도에서의 군축과 군비통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 북한 핵문제

러시아는 100억 달러 이상을 소비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으로 동결되었으나 북한은 이미 1~2개 핵폭탄 제조를 위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²⁰⁵⁾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하였을 때 러시아의 핵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시적으로 동결된

205) “Reaction in Russia to Hwang Jang-yop’s Statements,”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6.txt, Aug. 13. 1998.

핵개발 계획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핵개발은 필연적으로 핵실험을 요하나 북한은 아직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몇 년 전에 중국 영토에서 실험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아직까지 핵폭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둘째, 그러나 논의 참여자의 다수는 만약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 계획을 시작했다면 제네바 기본합의문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북한은 단지 연구와 개발의 속도를 늦추었고 이를 완전히 은폐하고 있다. 단지 '핵방패'가 사회주의 국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이 비밀 핵개발 계획을 계속하려는 북한의 결심을 강화시킬 것 같다. 러시아 외무부의 한 관리는 북한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평양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으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① 거대한 국가 인도가 자신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작은 북한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 ② 이 국가들의 핵실험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범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핵 보유의 이미지를 반영함으로써 추가적인 열매를 거두어들일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중지하겠다는 위협 발언으로 미국 및 기타 이해당사국들로부터 더 큰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적절한 양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²⁰⁶⁾

이와 같이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 연구와 개발을 완

206) "The South Asian Test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2.txt, 13 Aug. 1999.

전혀 은폐한 가운데 속도만 늦추면서 지속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금창리 지하 핵시설이 다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일으켰다. 한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증거물들의 최종분석을 미국 국방정보국(DIA)에 의뢰하였고 DIA의 약 6개월 간에 걸친 분석을 통해 한·미 양국은 1998년 4월 평북 대관군 금창리 지역에 원자로와 플루토늄 생산시설 등이 모두 들어서는 핵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영변의 200MW급 흑연감속로를 수용할 수 있는 40만㎡ 크기의 굴착공사와 함께 원자로 냉각용 저수지를 위한 댐공사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시설로 추정되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이 핵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추정하면서도 금창리에 지하 핵시설을 건설중일지 모른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긍정적인 증거들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 정보자료들에 의해 제공된 위성 사진들이 건설작업 이외에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유사한 작업은 다양한 목적으로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북한은 도처에 지하공장, 저장시설, 도로, 통신망 등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창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계획이 군사시설일지 모르나 핵계획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적 입장이었다. 러시아는 만약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핵개발 계획을 재개하려고 결정했다면 기존 시설을 재가동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한 지하 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5~8년이 소요되고 북한의 재정은 고갈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러시아는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자원을 소비하는 것 이외에도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따라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마저도 잃을 것인데 왜 핵개발을 재개하겠는 가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러시아는 제네바 핵합의를 동결시켜 의

회가 재정지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의회와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북한에 대한 핵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북한은 생존문제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도 핵위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다.²⁰⁷⁾ 이는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 미국특사가 1998년 11월 16~18일 북한을 방문하여 금창리 시설의 핵관련 활동 의혹해소를 강조하였을 때 북한은 핵개발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12월 4~1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미·북회담도 북한의 현 장접근에 대한 보상 요구와 미국의 수용 거부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이 12월 17일 전격 단행한 대이라크 공습 이후 일부 해외언론들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습 가능성도 시사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대응조치, 보복조치가 가능하다는 성명들을 연속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1998년 말에 한반도 정세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²⁰⁸⁾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을 둘러싼 미·북간 대립으로 제2의 ‘한반도 위기설’이 대두되었다. 특히 코언 미 국방장관은 1999년 1월 13일 도쿄를 방문하여 일본 방위청 장관과 회담할 때 “평양이 그 어떤 새로운 도발을 시도한다면 힘의 행사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평양에 주어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강령을 이행하기 위해 건설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평양을 위협하는 성명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역내 정세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²⁰⁹⁾ 또한 이바노프 러

207) "The DPRK's Alleged Construction of a New Nuclear Facility,"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3.txt, Sep. 3, 1998.

208) 『러시아방송』, 1998. 12. 31.

209) 『러시아방송』, 1999. 1. 18.

시아 외무장관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1월 25일 회담시 북한 핵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방러 중인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도 논의해 이라크 사태와 같은 군사개입에 대해 러시아측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²¹⁰⁾ 또한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과 관련, “압박적인 수단으로 북한시설을 사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 러시아가 북한핵 강제사찰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²¹¹⁾ 다행히도 이 문제는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미·북간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다. 미국은 1999년 5월에 1차, 2000년 5월 2차, 추후 의혹이 남아 있는 한 추가방문을 하기로 하는 대신 북한에 50만톤 정도의 식량과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시범농업지원사업(씨감자, 식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미 국무부는 5월 실시한 북한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북한측이 핵계획 동결에 관한 미국과의 기본합의를 위반했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월 23일 밝혔다.

북한 핵과 관련, 러시아는 북한이 상기와 같이 핵계획 실현에 대한 향후 의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주변국가들을 긴장에 묶어두고 있으며 남한에 대하여서는 위협한 군사행동을 실행하고 있고 이러한 북한의 행동양식은 꽤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²¹²⁾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 핵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등이 북한에 대해 군사체제를 가하거나 강제 사찰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협상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210) 「중앙일보」, 1999. 1. 26.

211) 「동아일보」, 1999. 2. 1.

212) V. P. 뜨까첸코,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심」, p. 2.

(나) 북한 미사일 문제

구 소련 공산당중앙위원회 문서보관국의 비밀문서(문서번호 28978)와 관련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1963년부터 미사일 개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구 소련측에 인력파견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 무관 강형수 준장은 1963년 8월 3일 소련 제1국방차관 그레츠코에게 미사일 개발기술 습득을 위한 인력 교육 등에 대한 소련의 협력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후 북한은 평양주재 소련대사인 알렉산드르 푸자노프에게 조언을 요청했으며, 그는 “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국방·군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브레즈네프만이 이 문제에 대해 결정내릴 수 있다”고 말해 주었고 1963년 말 북한측으로부터 훌륭한 조언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인사말을 들었다. 따라서 북한이 브레즈네프를 통해 미사일 기술습득을 위한 인력파견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²¹³⁾

이 결과 북한은 1980년대 초부터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에 착수할 수 있었고 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B’(사정거리 300km)의 개량형인 ‘스커드 C’(사정거리 500km)를 제조하여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1단형 중거리 미사일(사정거리 1,000km)을 1993년 5월에 시험발사에 성공하여 생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단식 미사일 ‘대포동 I호’(사정거리 1,500km)와 ‘대포동 II호’(사정거리 4,000km)의 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중동 지역에 생산된 미사일을 직접 수출하며 기술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은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의 완화, 서방 기업의 기술이전,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및 중국으로부터의

213) 「중앙일보」, 1999. 8. 30.

기술자 고용 및 기술지원, 파키스탄 및 이란 등과의 협력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 및 부품과 기술의 제3국 지원은 미사일 탄두에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하는 경우 대량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들 가운데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자국과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에서 혹은 가까운 지역에서 핵 및 다른 형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기술과 운송수단의 확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²¹⁴⁾ 특히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탄저열, 콜레라, 페스트, 천연두 병원균에 대한 특별연구센터가 작동중이며 북한이 생화학 무기들을 계속 개발할 것으로 믿고 있다.²¹⁵⁾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다단식 '대포동 I호'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북한은 쏘아 올린 로켓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광명성 1호'라 명명하고 지구 궤도를 정상적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 현재 가장 신빙성 있는 결론은 북한이 '대포동 I호'를 추진체로 사용하여 인공위성의 발사(제1단을 '노동' 미사일, 제2단을 '스커드 C'로 하되 '스커드' 탄두 부분에 제3단 로켓과 소형 인공위성을 탑재)를 시도하여 궤도진입에는 실패하였으나 미사일 시험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러시아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시험발사를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고 이것이 러시아 극동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

214) V. S. 마스니코프, 「러시아와 중국: 아태지역에서 동반자관계의 전망」, p. 7.

215) "Reaction in Russia to Hwang Jang-yop's Statements,"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6.txt, 13 Aug. 1998.

기 때문에 시험발사 직후 무척 당황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그 발사체가 러시아의 배타적인 경제수역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하면서 북한에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북한 관계자의 대답은 “북한은 단지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유사한 경우 미국, 러시아 및 기타 국가들이 결코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았다. 북한도 예외이어서는 안 된다. 세계는 미사일을 생산하여 타국을 위협하는 권리를 갖는 국가와 이러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국가로 구분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폭탄을 시험하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소국이 평화로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그런 야단법석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었다고 한다.²¹⁶⁾ 러시아는 이 당시 나라마다는 각국이 방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자기 국익을 보호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공격용 무기가 시험되는 경우 이웃들의 불안과 위구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실험과 관련된 완전한 정보가 없는 것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는 입장 표명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이웃 국가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북아의 공동안보 및 안전 시스템 구축과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²¹⁷⁾ 또한 「러시아방송」은 1998년 9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경제, 인도차원의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남북한관계를 진전시킨다고 하는 이때에 평양이 미사일을 실험한 것으로 그 관계증진이란 기회마저 무효로 되고 있다고 북한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1998년 10월 5~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비공개리에 개최된 ‘미

216)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fter the First Session of the 10th SPA,"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4.txt, 6 Jan. 1999.

217) 「러시아방송」, 1998. 9. 1, 9. 4.

사일기술통제체제'(MTCR) 1998년도 총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지역과 세계 평화·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비난하는 의장의 성명발표가 합의되었다. 이에 가장 충격이 컸던 일본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자국의 기술자들이 관여했다는 국제여론을 의식하여 처음에는 공개성명 발표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에는 문안내용의 수정을 통해 의장성명 채택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과 수출의 억제를 위해서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²¹⁸⁾ 또한 싱가포르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22개국 외무장관들은 1999년 7월 26일 한반도 관련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한·미·일 3국 외무장관들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한반도 긴장해소는 순전히 대화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자제를 촉구하였다.²¹⁹⁾ 한편 같은 해 8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러 안보관계 회의에서는 미·일의 TMD 체제를 자극하는 요인의 하나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²²⁰⁾ 9월 12일 미국과의 베를린 회담을 통해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보하였을 때 러시아는 이를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태지역 전반사태의 안정화를 내다보는 진일보'로 평가하고 "북한이 동의한 것은 이웃 나라들의 의구심을 원만히 감안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며 평양의 미사일 강령이 미·일의 TMD 구상을 부

218) 문장렬, "북한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군비통제』 (1998. 12), pp. 245~246.

219) 『러시아방송』, 1999. 7. 27.

220) 『러시아방송』, 1999. 8. 25.

추겨 주고 있을 것이라는 러·중의 의구심도 풀어주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²²¹⁾

(다) 한반도 군비통제

국제사회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자국 인구의 0.9~1%에 해당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언제라도 대남 무력도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는 병력과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 남한은 북한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을 통한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체인구 약 1.5%의 병력과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군축과 군비통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군축과 관련, 러시아는 남북한이 장차 군사훈련에 참관단 초청,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 군사문제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등의 조치들을 통해 병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남북한간 군사대치의 해소와 무기감축 및 한반도 신뢰구축 문제에 유럽내 핵 및 재래식 무기 감축협상 경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²²²⁾

(5) 평화체제 전환문제

러시아는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정전협정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되어

221) 「러시아방송」, 1999. 9. 14.

222) 브로니슬라브 오멜리체프(CIS 군총사령부 제1참모차장), “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에서의 적용가능성”(북한연구소-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주최 한반도군축 4개국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6. 1), p. 6.

야 하며 평화협정이 남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4자회담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처음에는 이를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본입장은 자국이 포함된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한반도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1년 3월 유엔사측이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사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한 것을 구실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이후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단의 철수와 사무실 폐쇄,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일방적 설치, 군사정전위원회 중국 대표단의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무장군인 투입 등을 통해 정전체제의 무실화를 기도하였다. 이 당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결정을 한반도 안정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할 새로운 장치가 나올 때까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 안정유지를 중시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는 "정전협정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벌써 43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 깊은 정전협정을 하루 사이에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²²³⁾ 또한 북한이 비무장지대의 안전보장을 거부하고 군대를 3차례 투입한 것과 관련,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아직 한반도에서 새로운 안보시스템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의 시스템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반도 두 나라가 긴장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가 제의했던 이 지역 안보를 위한 국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였다.²²⁴⁾ 당시 쿠나제 주한

223) 「러시아방송」, 1996. 4. 10.

러시아 대사도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나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정전협정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당사자인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²²⁵⁾

한반도 정전체제에 대한 이러한 러시아 입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기초한 현재의 평화체제가 시대에 뒤쳐져 새로운 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평화체제는 한반도 내외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협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협정체결은 매우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정전협정의 모든 당사국들은 새로운 평화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협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²²⁶⁾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관련, 한·미 양국이 1996년 4월 16일 4자회담을 제의하였을 때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시대에 한반도문제에서 긴밀히 연관되어 왔었고 현재에도 한반도의 이웃으로서 강력한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국이 배제된 4자회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데무린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한반도 평화논의에 러시아를 배제시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²²⁷⁾고 불쾌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테니소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 계획은 러시아측을 고려

224) 「러시아방송」, 1996. 4. 9.

225) G. F. Kounadze, "Russia's Foreign Policy in Evolving World and Prospects of Russia-Korea Relationship," pp. 165~166.

226) Evgeny Afanasiev, “한반도 평화와 안보 및 한-러관계의 전망” (아태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1998. 6. 8), pp. 6~7.

227) 「조선일보」, 1996. 4. 23.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에 거의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과거에 한반도 및 그 주변 상황 정상화에 역할을 하였고 계속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해와 직접 연결된 문제 해결로부터 러시아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의해 이해될 수 없다”²²⁸⁾는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처음에는 4자회담에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4자회담 본회담이 연속 개최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명백히 지지를 하지는 않으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이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국장은 “러시아는 4자회담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 회담의 참여국들이 남북한에 수용 가능한 실질적인 결과들을 이루어 낸다면 모스크바는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²²⁹⁾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은 일시적 조치이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 실제로 4자회담은 지금까지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문제가 많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²³⁰⁾는 것이 러시아측의 반응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러시아는 자국이 포함된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한반도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루킨 러시아 국가두마(연방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1997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하였을 때 4자회담 문제를 거론하고 “모스크바를 포함해 기타 유관국들도 참가시키는 보다 넓은 다자간 회담이 바람직하다”²³¹⁾는 입장을 밝혔다. 다자간 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러시아 주장의 근거는 첫째, 미·북 제네바 핵합의

228) E. Bajanov, “Russian Perspective On A Post-Armistice Order In Korea,” p. 5.

229) L. Moiseyev, “Russian Assessment and Policy,” p. 5.

230) G. Toloraya, “Russian Policy on Korean Peninsula,” pp. 138~139.

231)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 제64호 (1997. 4. 1~6. 30), p. 112.

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안전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한반도와 접경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한반도문제에 중요한 이해 당사국이라는 점, 셋째,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하는 북한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 등이다.²³²⁾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산하 현대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한반도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3가지 원칙과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안²³³⁾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우선 그는 한반도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3가지 기본원칙을 ① 6개국이 한반도문제 해결에 동등히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의 인정, ② 6개국 중 각국은 모든 기타 5개국간의 관계정상화 승인, ③ 각국의 대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①의 사항과 관련, 그는 타 당사자들이 한반도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남북한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화되더라도 4강국은 그 과정에 연계될 것이고 6개국중 어떤 국가를 그 과정으로부터 밀쳐버리거나 해결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시도는 그 과정 자체를 지체시키고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참가국: 6개국 이외에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및 유엔 사무총장과 IAEA 사무총장을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ASEAN 같은 다른 관련 당사국의 옵서버들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32) 이그나텐코 러시아 부총리 인터뷰, 「조선일보」, 1996. 4. 15; 테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 인터뷰, 「조선일보」, 1996. 5. 23 등 참조.

233) E. Bajanov, "Russian Perspective On A Post-Armistice Order In Korea," pp. 6~9.

○ 회담일정: 외무장관 수준급에서 회담을 시작하되 외무장관 회담은 회담에서의 협의사항(agenda)과 일정을 승인하고 협의사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4개 실무그룹(working groups)을 구성한다.

○ 남북관계 증진 실무그룹

- 목적: 남북한간의 안정되고 다각적인 대화 및 접촉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수행
- 협의사항: 지금까지 남북한에 의해 제시된 모든 제의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실현을 위한 이해의 달성(군지휘자간의 직통전화 설치와 정보 교환, 경제협력의 발전, 운송체계의 복구, 인적 자유왕래 개방과 인적·전화 접촉, 우편소 연결, 이산가족 재회); 「군사문제 상설위원회」와 「교류·협력위원회」, 창설; 정상회담 및 총리와 장관급 협상의 정례화, 홍보정책에 대한 합의; 「7·4 남북공동성명」에 나타난 기본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기초로 한 통일원칙의 토론 및 조절위원회 활동의 개시, 조절위원회 산하에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 5개 소위원회 구성

○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대체 실무그룹

- 참가국: 정전협정 서명국, 중립국 감독위원회 구성국, 유엔과 이 회담 참여국
- 협의사항: 정전협정 종료시 주한미군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유엔 깃발과 상징물; 일시적 조치로서 비무장지대 미군의 중립국(폴란드, 체코, 스웨덴, 스위스) 군대로의 대체; 비무장지대내 군사시설의 해체;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거리로 남북한 군대의 철수

○ 한반도 신뢰구축 실무그룹

- 목표: 핵무기 실험·생산·보유·도입·유지·배치의 포기 및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 실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의 이행
- 협의사항: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의 장려;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장려; 핵강국들에 의한 한반도 비핵지위의 보장;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지원; 사용된 연료의 이용과 디젤연료 이전의 지원; 남한내 미국 핵무기의 부재 확인; 남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생화학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남북한에 의한 생산·배치·획득에 관계된 문제들의 심사; 남북한의 화학무기에 관한 협약 비준과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가입

○ 회의 전 참여국간의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 협의사항: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방해하는 문제의 해결방안

○ 실무그룹 공동회의: 상응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다방면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상기 실무그룹들의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실무그룹들의 건의사항은 장관급회담에서 승인을 받는다.

자국이 제외되어 있는 4자회담을 반대하고 상기와 같은 다자간 국제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러시아의 실질적 의도는 평화체제 구축이나 통일 등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이었으며 현재 주북한 대사인 테니소프는 1996년 5월 방한시 “러시아는 지금까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인 바, 러시아가 배제된 한반도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어려울 것임”²³⁴⁾을 시사한 바 있다.

(6)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문제

구 소련시대부터 아시아지역에 집단안보체제의 형성을 주장하여 온 러시아인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동북아 6자회담’ 구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구 소련시대에 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 확보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집단안보체제 형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이는 1969년 브레즈네프의 ‘아시아집단안보 구상’, 1985년 고르바초프의 ‘전아시아회의’ 제안과 1986년 CSCE 모델의 ‘태평양회담’ 제안 및 1988년 ‘아·태안보협의기구’ 창설제안 등을 통하여 나타난 바 있다. 구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도 현재 역내 안보문제에 관한 논의와 의견교환을 위한 메카니즘을 창출하려 하고 있다. 동북아차원에서 다자안보협의체의 창설을 도모하면서, 아·태지역 차원에서는 유엔헌장하에 효과적인 평화유지 능력을 보유한 ‘지역안보공동체’(regional security community)의 형성을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다음과 같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형성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 티타렌코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6개국이 역내 안보와 경제 및 기타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안보체제(system of cooperative security)의 형성을 주장한 바 있다.²³⁵⁾ 열린 대통령은 1992년 11월 방한시 국회연설에서 분쟁방지를 위한 아·태 지역안보

234) 「중앙일보」, 1996. 5. 23.

235) Mikhail L. Titarenko, “Disintegration of the USSR: It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and the Russian Policy in the Region,” a paper prepared at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October 13~14, 1992, p. 7.

협의체의 준비단계로서 동북아 국가간의 다자안보협의체(multilateral security consultations)를 제의하면서 국제적 무력분쟁 조정기구와 지역전략 연구센터의 설립을 주장하였다.²³⁶⁾ 쿠나제 외무차관도 역내국가에 있는 안보문제 전문가들의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²³⁷⁾ 특히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의 체빈 연구위원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① 무기감축, ② 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 ③ 핵물질의 보안 문제, ④ 원자력 발전소 개발문제, ⑤ 무기거래 문제, ⑥ 환경보호, ⑦ 해양자원의 보호, ⑧ 인권문제 등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로 제의한 바 있다.²³⁸⁾ 이와 같이 역내 국가중 한국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는 비정부간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안보대화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도 1993년 제1차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은 현존의 양자간 안보동맹을 견지하려는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한편, 대미 군사 긴장완화 유도,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증대 견제, 한반도에서의 분쟁방지, 역내 안보위협 제거 및 자국 영향력 증대 등의 목적들을 달성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 추진 구상과 관련, 러시아는 “이 구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지한다.”²³⁹⁾고 밝힘으로써 역내국가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36) *The Korea Herald*, November 20, 1992.

237)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December 8, 1992, p. 11.

238) Alexander Z. Zhebi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Russia,” 『지역연구논총』, 제6집, 1994, pp. 164~168.

239) *Daily Report: East Asia*, February 12, 1998.

IV.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주변국 협력유도 방안

1. 기본방향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남북한관계 차원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하여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립구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일·중·러 등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III장에서 논의한 주변 4국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국의 협력유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주변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가 동북아 정세 안정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시시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주변 4국들 모두가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분단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즉, 주변국들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반도문제가 일차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남북한은 이미 1992년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여 화해와 불가침에 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냉전적 대립을 청산하고 신뢰를 회복하기로 한 문서이다. 그러므로 이 합의서가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남북한간 냉전적 갈등은 어렵지 않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남북 기본합의서가 복원될 수 있도록 주변국에게 일정한 역할 수행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한반도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이후 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통일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우호적이고 동북아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킴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미·일·중·러의 지지를 유도하기가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일·중·러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주변국들의 입장이 다르게 표출될 수 있다. 최근 미·일이 '신안보협력지침'과 TMD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동북아 안보질서를 주도하려 하고 한·미·일이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²⁴⁰⁾

아울러 향후 동북아질서가 중·일간의 경쟁구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은 냉전구조 해체 등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에게 균형 있는 외교자세를 구사해야 한다.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냉전시대처럼 특정 강대국에게 일방적으로 경사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물론 한국이 주변국들에게 균형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주변국 모두로부터 지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한·미 공조의 틀을 깨뜨리면서까

240) 1999년 12월 열린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방문시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역미사일방어체계' 구축문제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中俄相互支持維護統一," 「文匯報」(香港), 1999. 12. 11.

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치·안보적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21세기 초반까지는 미국이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질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와 균형 있는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북한의 대남 침략의도를 억제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셋째,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를 유도해 내야 한다. 북한은 막대한 재원을 군사비로 지출함으로써 내부 경제파탄을 심화시키고 있고,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 북한의 내부요인이 북한으로 하여금 재래식 군사력 증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정책을 지속하도록 하는 근본적 이유이지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인식도 북한의 군사정책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한·미동맹관계를 탈냉전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조정하고,²⁴¹⁾ 북한과 중·러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유도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과 중·러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우선 북한과의 장성급대화 활성화, 남북한간 군사직통전화 가설, 비핵화 의지 천명, 적정한 군사비 책정, 대북 군사위협 포기 선언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에게 군사비를 감축하고, 생화학무기금지조약과 핵실험전면금지조약 참여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대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면

241) 향후 한·미동맹체제 재조정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종철,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1998), pp. 68~76 참조.

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쌍무 안보대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변국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고립에 처해 있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적대감과 침략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간주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체제 흡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제고립을 완화시켜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미·일 관계개선 이후 북한은 폐쇄적 경제체제를 고수하기보다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국제고립에서 해소된다면,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도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되어 남북대화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과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을 냉전적 시각에서 반대하기보다는 이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 내부 및 주변상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통해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거나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학습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주변국 특히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²⁴²⁾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남북한이 진정으

242) 실제로 중국은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방중시 한국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이 남북한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후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바,²⁴³⁾ 한국이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동북아지역 차원의 협력안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협력안보는 동맹을 통한 안보노력과는 상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간 신뢰를 쌓아 분쟁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분쟁 예방을 위한 대화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지역국간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면, 이는 한반도의 냉전적 대립을 해소하는 데 건설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북아에서 협력안보체제가 정착된다면, 이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는 중·러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와 중·북간 군사동맹조약에 대한 한·미·일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처럼 동북아 국가들도 양자 차원의 안보대화 뿐만 아니라 다자 차원의 안보협력대화를 활성화하여 역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동북아지역에서는 국가들간에 다양한 이해, 문화, 역사적 전통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 안보협력기구를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 양자간 신뢰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느슨한 형태의 다자안보협

위한 4자회담에서 건설적 역할을 행사하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려는 한국의 노력에도 협력하였다.

243) 실례로 통일연구원과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1999. 10. 26,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중국의 선취룡(謙取榮) 소장은 남북한이 냉전구조 해체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력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 중국, 북한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지역국들 모두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안보협력대화 추진에는 찬동하고 있다. 지역 다자안보협력대화를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잠재적 대립을 보이는 강대국 중 특정국이 주도하게 될 경우, 상대방 국가가 의혹을 갖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한국은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지역 다자안보협력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

2. 주변4국 협력유도 정책

가. 대미정책

미국과 북한은 페리 구상에 따라 포괄적 협상을 논의하게 될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1999년 11월 15~19일 베를린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미국의 제재 추가 완화,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중지 보장방안, 고위급 회담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회담의제 선정에 관한 선호도가 달라 이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향후 미·북관계는 좀더 진전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 양국관계 현안이 논의될 것이며, 이와 함께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실무협상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협상의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측은 미사일 실험발사 유보 이상의 양보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미 의회는 북한과 핵미사일 협상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 의회 분위기는 페리의 대북정책 권고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000년 11월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대결이 과열됨에 따라 페리보고서를 토대로 한 대북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찬반 논의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미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북 고위급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는 물론 미 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대북 강경자세도 완화되어야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작업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북관계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국교정상화 시점을 전후하여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입장을 미국내 여론이 수용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 대북 포용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관한 대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즉, 미 국내 여론이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제시하고 있는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한·미간 학술회의, 의원외교, 미국내 로비활동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위급 협상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양측은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추가적인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상호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대북투자를 위한 미국 기업들의 조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단기적인 이윤확

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미국 기업의 실질적 투자는 급격히 증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합작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다른 외국 기업들의 대북투자도 급속히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북간 민간차원의 학술·문화·스포츠 교류가 증대되고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한국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국제테러국가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을 통해 대북 개발자금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4자회담에서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군사정보의 교류 등 미·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북한측이 호응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한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실시되면 한국은 미국이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외무장관회담을 전개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미·북관계가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4자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핵사찰 수용 및 미사일 수출 포기, 남북한 군비통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 남북한 군사·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미·북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협상에 북한측이 성의 있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북·미간 국교수립을 전후하여 일본도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미·북, 일·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한은 명실상부한 4강의 교차승인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북한도 체제생존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바, 우리는 미국·일본과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이들의 대북 경제협력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완전한 해결 및 남북한 군비통제와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고 미사일 개발·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남북한은 실질적으로 군축을 실시하게 되는 바,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는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면 이를 계기로 주변 4국과 안보협력대화를 활성화하여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대화가 상설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대중정책

중국은 남북한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며, 현재까지도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독특한 지위에 있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한반도정책의 근간으로 추진하면서 한국과도 정치·안보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도 엄연히 북한에 대해 막대한 경제지원과 외교적 협력을 제공하고, 자동군사개입조항을 담은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경제개혁·개방을 통해 축적한 경제력과 동아시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일정 역할을 행사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 완화 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도 적극 참여하여 건설적 역할을 행사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냉전구조 형성·심화 과정에도 깊이 개입해 왔다는 점에서,²⁴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원

244) 중국은 해방이후 북한정권의 수립과정과 1950년 한국전쟁 및 1953년 정전협정에 참여하였으며, 1954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반도문제 논의를 위한 국제회의에도 대표를 파견하였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 참여하여 자국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바, 중국의 협력유도를 위한 한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중재역할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 한반도문제는 원칙적으로 남북한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북한이 한국정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한국은 주변국을 통한 우회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한·중수교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부분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전략물자가 북한체제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아직도 북한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²⁴⁵⁾ 따라서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채널을 계속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중요한 정책은 중국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회와 당 중앙의 사영도소조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한국은 중국공산당내 핵심 지도부와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집행기관인 당 중앙대외연락부, 외교부 및 국방부의 지도자들과도 정례적인 교류·협력채널을 구축·가동해야 한다. 한국은 2000년 츠하오티엔(遲浩田) 국방부장과 주룽지(朱鎔基) 국무원 총리의 한국방문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고립이 북한의 대외개방을 저지하

245)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김태호, “탈냉전기 중국의 대북 영향력 동향과 전망,” 『國防論集』, 제42호 (1998년 여름), pp. 103~135 참조.

고, 한국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북한과 미·일에게 상호간의 관계개선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부 전략가들은 미·북, 미·일관계가 너무 급진적으로 발전되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²⁴⁶⁾

중국이 내심으로 미·북, 일·북관계 개선을 경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일의 한반도정책에 의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북, 일·북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려면 한반도문제 논의를 위한 한, 미, 일, 중간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차원의 다자안보대화를 활성화 함으로써 역내국가들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의 개방과 변화유도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불가피하게 매년 상당량의 식량과 원유 등을 제공해 주고 있는 나라로서 북한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꺼리면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중국은 동유럽 사회주의와 소련 붕괴 이후 서방국가들의 대중정책을 ‘화평연변(和平演變)’ 정책으로 간주하여 경계해 왔던 바, 한국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역설해야 한다. 나아

246)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개입정책을 전개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북한의 대미 의존도를 증대시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安洪泉, “調整中的美國對朝鮮政策,” 『現代國際關係』, 1999年 第7期 (1999. 7), p. 24.

가 북한이 개방으로 나오게 되면 중국 동북삼성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확대되어 한·중간 경제교류·협력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데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넷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를 유도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세계패권을 반대하고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²⁴⁷⁾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지역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만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양자동맹을 냉전시대의 잔재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최근 미·일동맹 강화를 중국전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²⁴⁸⁾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과의 군사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미국과의 협의하에 한·중이 군사훈련을 상호 통보하고 참관단을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군장교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일 군사동맹 강화라

247) 譚取榮, “關於消除朝鮮半島冷戰結構問題,” (통일연구원-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워크샵 발표논문, 1999. 10. 26), pp. 5~6.

248)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는 張德眞, “論美國歐亞大陸戰略,” 『人民日報』, 1999. 6. 4; “日美簽針對別國防務協議,” 『文匯報』(香港), 1998. 4. 29 등 참조.

는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도 한국과의 안보협력 확대 필요성을 갖고 있다. 한·중 사이의 안보협력 확대는 중·북한간의 군사동맹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기존 4자회담에서 중국과의 양자 차원의 사전·사후 대화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의 군사동맹조약의 성격변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과 북한간의 군사동맹조약의 강도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은 아직도 매년 7월 군사동맹조약 체결을 기념하면서 군사적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특히 중·북 군사동맹조약 제2조에 자동군사개입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국은 북한에 군사력을 파병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냉전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중·북 군사동맹의 성격변화, 특히 자동군사개입조항의 삭제나 변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국은 중국에게 중·북 군사동맹을 탈냉전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물론 중국이 한국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체제에 대한 성격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중간의 안보협력이 확대되고 중·북한간 군사동맹조약의 성격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한·중간에 불가침합의서나 한·러간의 경우처럼 기본관계조약 체결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가능할지도 모르는 미·북 사이의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합의서 체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대화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 다자안보협력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불안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소하고 평화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동북아지역 차원의 냉전적 대립구조와 연계되어 심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동북아질서를 안정시키는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대화에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동북아협력대화(NEACD)와 아세안지역포럼(ARF)과 같은 대화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자 차원의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속력을 가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우선 민간 차원의 다자안보 논의가 축적된 다음 정부 차원의 다자안보 논의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해 왔다. 중국은 영토문제와 대만문제 및 인권문제와 같은 내정문제를 다루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대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먼저 민간차원의 다자안보 논의를 활성화하면서 이를 정부 차원의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문제, 인권문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의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대일정책

북·일관계 개선은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북·일관계 개선에 대해 경계해야 할 측면도 적지 않다.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어깨 너머로 북한과 직거래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미·일 사이의 공조체제를 균열 시키려는 술수는 아닌지 정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일본

과의 관계개선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을 자극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국에게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설득해야 하는데, 특히 강력한 통일한국에 대하여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일본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주변국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핵의혹과 미사일 문제가 해소되어야 비로소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북·일 경제협력은 북한이 처한 위기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를 서두르는 이유는 경제적 동인 때문이라는 것은 알려진 일이다. 북한이 1999년 말 평양을 방문한 일본 초당파 의원단에게 그 동안 완강히 부인해 온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하고,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문제 등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식량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이 수교협상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의 피해를 배상받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경제적 실리를 통해 붕괴된 경제기반 복구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 보상이라는 실리를 챙기고 그 결과 불안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 이는 한반도 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안보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북한과 미·일과의 수교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왕의 정부 입장이지만 북·일 두 나라의 관계 급진전으로 북한이 우리의 경험에 매

달리지 않아도 좋은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북·일 경협이 남북대화를 더욱 지연시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가 일본의 경제지원으로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 북한이 전면적인 개혁·개방보다는 부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남한과의 경협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이는 북한이 체제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남한과의 경협보다는 체제안정과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일본과의 개방 및 경협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를 조건으로 일본에게 북한과의 경제협력 우선권을 부여할 경우 북·일 경제교류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경제협력 범위를 크게 제약할 것이고 남북한 대화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정부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은 대북 정경분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고 냉전종식후 일본의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고자 하는 일본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불투명한 현 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긴급사태의 발생은 북한 난민의 대거 유입, 최악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공격까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는 일본이 바라는 일이다. 따라서 일본은 국제적 논의의 틀 속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일본의 안정을 담보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자신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국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외교적 노력과 남북한 관계진전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기존 4자회담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로 일·러를 포함한 정부 고위급회담의 장을 창설, 한반도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시아 전역의 평화와 안정문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각국이 지향하는 목표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상이몽(同床異夢)적인 참가라 하더라도 그러한 기구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본다. 향후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량과 역할, 그리고 참여의욕 등을 감안해 적절한 6자협의기구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와 관련, 일본은 다자안보협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변국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 역할증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한 한·일협력과 관련, 한·일 양국은 비정부·민간 차원의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라. 대러시아정책

1990년 9월 수교이후 한·러 양국관계는 제반 분야에서 확대·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1998년 7월 발생한 양국 정부의 상대국 정보외교관 맞추방 사건으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다행히 양국 정부의 수습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우리 정부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정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정부의 협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대러정책을 재검토·

평가하고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향후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안보·전략적, 경제적 이해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사태발전을 주시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배려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러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러시아를 한반도 안정과 평화 및 통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주변 4국 중 일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도 자국의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이 필수적이며 한국의 지속적인 정치적, 경제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5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정보외교관 맞추방 사건으로 훼손된 대러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는 정치와 안보·군사 및 경제면에서 기존의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확대·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을 좀더 배려하는 한국의 대러정책은 이러한 과정뿐만 아니라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러시아측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남북한 적대관계 해소의 문제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남북 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북관계가 정상화되어 한반도에서의 세력관계가 자신에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해야 남북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중개자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러시아는 남북한간 대화를 촉진시

키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²⁴⁹⁾이라고 남북대화에서 러시아의 중개자 역할이 가능함을 시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외교채널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간의 우호관계 유지가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러시아측에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북 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한·러간 고위인사 회담 등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도록 요망해야 할 것이다.

둘째, 4자회담과 미군유해 인도 등 미·북간 접촉이 증대하자 러시아는 자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견제하는 정책을 수행하였으나 미·북 및 일·북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돌발적 행동 방지 등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에는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미·북 및 일·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이것이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과 경제난 해소에 유익하다는 점을 북한측에 주지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일과 북한의 당 지도부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실패한 정치개혁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 때문에 광범한 정치·사회 개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고 강력한 통제하의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평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평화정책이란 북한에 대한 설득, 접촉과 대화, 관계의 제도화, 협력, 권

249) “Interviews with Ambassadors-Russia,” *The Korea Times*, January 7, 1999, p. 1.

고를 의미하는 바, 우리가 주목할만한 주장이다.

넷째, 러시아는 북한이 이미 1~2개 핵폭탄 제조를 위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하였으나 핵실험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 핵폭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따라서 단지 연구와 개발의 속도를 늦추었고 이를 완전히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측의 평가이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러시아와도 북한 핵관련 정보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핵정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러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참여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 문제는 남북한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적 차원의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주변국들과의 정보교류가 중요하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 일본은 TMD 등 미사일 방어체계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이를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 내지 군사대국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러시아 정부에 인식시키고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교류를 요청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주요 이유는 첨단부품 수출통제의 이완, 서방기업의 기술이전, 파키스탄 및 이란 등과의 국가간 협력 때문이며 이외에도 러시아 및 중국으로부터의 기술과 기술자 지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97년 5월 19일 「러시아방송」은 러시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총국장 레오니드 이바초프 중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낮은 수준이기는 해도 모스크바는 평양과 군사기술협력을 보존하고 있다. 소련측에 의해 조선에 제공된 무기의 부속품 공급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²⁵⁰⁾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

250) 「내외통신」, 종합판(64) (1997. 4. 1~6. 30), p. 404.

일 개발이 역내 안보정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기술이나 부속품의 제공을 자제해 줄 것을 러시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다섯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문제와 관련, 4자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잘 준수하도록 러·북간 고위인사 회담 등에서 북한측에 촉구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보장이 필요한데 러시아가 여기에 보장국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4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야 한다.

여섯째, 동북아 6자회담은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역내 국가간의 상이한 입장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러 양국은 이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의 추진 목적을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실질적 기반조성'에 두고 이러한 기반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양국이 공동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CSCE의 성공사례 연구로부터 동북아지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한·러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한반도는 발칸반도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교차하고 있는 전략 요충지이다. 소련붕괴 이후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동북아시아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 최대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과정에서 이들 주변 4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도 주변 4국의 한반도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문제는 국제환경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바, 남북한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환경 차원의 한반도 냉전구조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간 민간차원의 교류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남북한간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 그리고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냉전구조를 지속시키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환경 요인으로는 미·중간 갈등,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와 북한·중국·러시아 안보협력간의 느슨한 경쟁구조 그리고 북한의 대외고립이 제시되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주변4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미·중·일·러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한반도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대체적으로 찬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변4국은 한반도의 현상변화가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는 점을 우려하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자국의 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를 위해 한국과의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대북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반도 안보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중단·유예시켰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대북 제재조치를 대폭 해제하고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미·북관계 개선도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미국은 북한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권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 미국은 4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하고 있는 중국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추진하는 대북 ‘햇볕정책’을 지지하면서 북한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대외고립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북, 일·북관계가 너무 급속하게 진전되는 데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하지만,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의 기도를 저지하는 데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북한의 개방을 바라지만, 내정 불간섭 차원에서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

구하지는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 중국은 자국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4자회담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일·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으로 보고 있다. 주변4국중 일본이 가장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 반대하는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역내 군사역할 증대의 구실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데 소외감을 느끼고 6자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내문제로 한반도문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을 바라면서도,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약화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러시아가 포함된 다자간 국제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을 기초로 하여 주변국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주변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가 동북아 정세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변국들에게 강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이후 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셋째, 남북한간 군사

적 신뢰구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변국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대화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본 정책은 미·중·일·러의 입장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은 미·일과 확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안보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우선 2000년 11월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미국 조야에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국에게는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행사하도록 외교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대화 카드를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 적극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곽태환. 「국제정치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서울: 서울프레스, 1999.
- 김규륜. 「동북아경제협력의 발전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김영춘. 「일본의 대외 원조정책 연구: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한관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박영호.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박종철.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신상진.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_____.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여인곤 외.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외무부. 「러시아연방 개황」. 1995.
- 이호재 편. 「한반도평화론」. 서울: 법문사, 1986.
- 전동진. 「한·일 안보협력 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통일부.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서울: 오성사, 1999.
- 통일연구원.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관계 전망」. 민족통일

- 연구원-일본오카자키연구소 공동주최 발표논문집, 1998. 8. 28.
- 황병무·멜 거트브. 「중국안보론: 인민해방군 역할의 분석」.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2000.
- 杜攻 主編. 「轉換中的世界格局」.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2.
- 孫洛勤·崔洪建 主編. 「牽制中國: 神話与現實」. 北京: 中國言實出版社, 1996.
- 宋强·張藏藏·喬邊 等. 「中國可以說不」. 北京: 中國工商聯合出版社, 1996.
- 閻學通 等. 「中國与亞太安全: 冷戰後亞太國家的安全戰略走向」. 北京: 時事出版社, 1999.
- _____. 「中國國家利益分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6.
- 王希亮. 「日本對中國東北的政治統治, 1931~45」.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1.
- 張建華 主編. 「中國面臨的緊要問題」. 北京: 經濟日報出版社, 1998.
- 豊田利幸 編著. 「太平洋非核化構想」. 東京: 岩波新書, 1990.
- 塚本勝一 外. 「朝鮮半島情勢を中心とする北東アジアの戰略情勢とわが國の安全保障」. 東京: 平和安全保障研究所, 1989.
- Davis, Zachary S. et. al.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November 29, 1994.
- Hisayoshi Ina. *A New Multilateral Approach for the Pacific: Beyond the Bilateral Security Network*. The Johns Hopkins Foreign Policy Institute, 1993.
-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2. 논문

길정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Ⅰ): 장기·포괄적 접근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1999.

김국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레짐과 한반도 안보.” 『한반도 군비통제』. 1995. 10.

김명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한국학 전문가 30명이 본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환경 전망.” 『통일한국』. 1993. 12.

김태호. “탈냉전기 중국의 대북 영향력 및 북·중관계의 실제.” 『국방논총』. 1998.

뜨까첸코, V. P.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한양대 중소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1993. 5. 24.

_____.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공동주최 제9차 한·러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8. 10. 22~23.

마코토 가와나고. “지역안보와 일본.” 『동북아 안보협력 문제점 및 전망』. 제1회 KIDA/RIPS 동북아 국방포럼 발표논문집, 1993.

문장렬. “북한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군비통제』. 1998. 12.

배정호. “북·일관계의 변천과 북·일수교 전망.” 『한반도 냉전구조 해

- 체방안(Ⅲ). 통일연구원 제30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9. 8. 11.
- 브로니슬라브 오멜리체프. “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에서의 적용가능성.” 북한연구소-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주최 한반도 군축 4개국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6. 1.
- 송영선. “亞·太地域의 多者安保協力體制는 可能한가?” 「오늘의 군사운영 분석」, 제9권, 제2호. 1992. 12.
- 신상진. “대만문제와 중·미관계: 동아시아에서 패권확보를 위한 대립.”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_____. “중국: 국력에 기반한 다자안보협력 참여.” 한겨레신문사 편. 「새천년, 새세기를 말한다, 1」.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9.
- _____. “중국의 대북한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분석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관계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민족통일연구원-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워크숍 발표논문집, 1998. 11.
- 외교안보연구원. “미야자와 독트린과 일본의 아태지역 정책방향,” 「主要國際問題分析」. 1993. 2. 17.
- 이즈미 하지메. “일본과 한반도: 동북아 핵비확산구상.” 「동북아 안보협력 문제점 및 전망」. 제1회 KIDA/RIPS 동북아 국방포럼 발표논문집, 1993.
- Zhebin, Alexander. “「평화정책」의 재개: 대북개방 유도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제3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3. 10. 18.
- 제성호.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전략: 내용, 의도 및 문제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민족통일연구원 제16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5. 6. 21.
- 티타렌코, M. L. “동북아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안보 개념.” 한양

- 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공동주최
제9차 한·러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8. 10. 22~23.
- “해외전문가종합진단: 김정일 북한, 생존의 조건.” 「신동아」, 1994. 9.
- 唐天日. “先發制人攻擊論의侵略本質.” 「瞭望」, 1999年 第32期. 1999.
8. 9.
-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鄧小平文選」(一九七五~八三年). 北京: 人民出版社, 1983.
- 徐學銀·朱憲. “評新干涉主義.” 「現代國際關係」, 1999年 第8期. 1999. 8.
- 時永明. “亞太安全中的矛盾與合作.” 「文匯報」(香港). 1997. 12. 16.
- _____. “亞太安全環境與地區多變主義.”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1
期. 1996. 1.
- 安洪泉. “調整中的美國對朝鮮政策.” 「現代國際關係」, 1999年 第7期.
1999. 7.
- 閻學通. “亞太地區安全形勢.” 「世界知識」, 1997年 第19期. 1997. 10.
- 王新生. “日本向何處去.” 「世界知識」, 1999年 第12期. 1999. 6.
- 虞少華·吳晶晶. “曲折發展的朝鮮南北關係.” 「國際問題研究」, 1999年 1
期. 1999. 1.
- “日美簽針對別國防務協議.” 「文匯報」, 1998. 4. 29.
- 蔣建清. “北約二十一世紀新戰略及其影響.” 「國際問題研究」, 1999年 第
3期. 1999. 7.
- 丁詩傳·李強. “朝鮮半島和平機制及其前景.” 「現代國際關係」, 1999年 4
期. 1999. 4.
- 朱成虎. “美國戰區導彈防禦計劃意欲何爲.” 「瞭望」, 1999年 第7~8期.
1999. 2. 15.
- 周恩來. “抗美援朝, 保衛和平.”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周恩來
選集」,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1980.

- “中俄相互支持維護統一.” 「文匯報」, 1999. 12. 11.
- 高木誠一郎. “中國とアジア太平洋の多國間安全保障協力.” 「國際問題」, No. 442. 1997. 1.
- 前田哲南·竹田いさみ. “アツア 太平洋に多國間安保は可能か.” 「世界」, 1996. 7.
- Bajanov, Evgueni. “Russian Perspective On A Post-Armistice Order In Korea.” www.nautilus.org/napsnet/fora/Ba_Bajanov.html.
- Bridges, Brian.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Toward Norma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2. Winter 1991.
- Garrett, Banning and Bonnie Glaser. “China Works on Its Design for a New Asian Security Structur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8~29, 1997.
- Guo, Zhenyuan. “Asian-Pacific Region Remains Peaceful.” *Beijing Review*. February 5~11, 1996.
- _____. “The Main Problems Affecting the Security in Asian-Pacific &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CCIS International Review*, No. 1. August 1994.
- Ji, Guoxing. “China Versus South China Sea Security.” *Security Dialogue*, Vol. 29, No. 1. March 1998.
- Jahn, Egbert. “Frieden.” Dieter Nohlen ed. *Pipers Wörterbuch zur Politik 1 Politikwissenschaft*. München: R. Piper GmbH & Co. KG, 1985.
- Kakizawa, Koji. “Japan’s Position on Suspect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 Defense Analysis*, Vol. IV, No. 1. Summer 1992.
- Kim, Myong Chol. "Kim Jong IL's Roadmap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Prospects of 4-Party Peace Talks." www.nautillus.org/napsnet/fora/13a_KimMC.html.
- Kislov, Alexander. "Russia and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XXIII, No. 4. Winter 1992.
- Kounadze, Gueorgui F. "Russia's Foreign Policy in Evolving World and Prospects of Russia-Korea Relationship." 『외교』, 제31호. 1994. 9.
- Miasnikov, Vladimir. "Russia in the New Concert of East Asian Powers." A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New Asian-Pacific Era and Korea"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0~21, 1992, Seoul, Korea.
- Moiseyev, Leonid. "Russian Assessment and Policy." A paper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Peninsula &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held by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25~26 November 1997, Seoul, Korea.
- Mori, Kazuko. "China's Pivotal Role in the Asia-Pacific Community." *Japanes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9, No. 3. Summer 1995.
-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fter the First Session of the 10th SPA." www.nautil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4.txt.

- Perry, William J.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 "Reaction in Russia to Hwang Jang-yop's Statements."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6.txt.
- Richardson, Michael. "Clinton, With Eye on Trade, Calls for a Pacific Rim Summi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9, 1993.
- Satoh, Yukio. "Reduction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Japanese View."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 Tkachenko, Vadim P.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Korea and the Russian Position."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 "The DPRK's Alleged Construction of a New Nuclear Facility."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3.txt.
- "The South Asian Test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ww.nautilus.org/pub/ftp/napsnet/RussiaDPRK/DPRK_Report_12.txt.
- Titarenko, Mikhail L. "Disintegration of the USSR: It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and the Russian Policy in the Region." A paper prepared at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 Toloraya, G. "Russian Policy on Korean Peninsula." 『亞太 Focus』,

제8집. 1998. 6.

Zhebin, Alexande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Russia." 「지역연구논총」, 제6집. 1994.

_____. "North Korea after Kim Il-Sung: Hard Choic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VII, No. 1. Summer 1995.

3. 기타

「로동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Daily Report: East Asia.

Defence News.

The Korea Herald.

The Korea Times.

Russia Today.

「文匯報」(香港).

「新華通迅」.

「人民日報」.

「讀賣新聞」.

「毎日新聞」.

「産経新聞」.

「朝日新聞」.

「러시아방송」.

「모스크바방송」.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계간 북한동향」. 서울: 통일연구원, 각호.

「내외통신 종합판」. 서울: 내외통신사, 각호.

Lord, Winston.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 March 19, 1996.

North Korea Advisory Group. *Report to The Speake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November 1999. www.house.gov.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Hearing on "Engaging the Hermit Kingdom: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1997. 2. 26.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Press Briefing by Joe Lockhart*, September 17, 1999. www.fas.org/news/dprk.

Washington File. *North Korea Unlikely to Collapse Any Time Soon*, Perry Says, US Department of State, 29 November 1999. www.usia.gov/cgi-bin/washfile.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의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독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낼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99-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	최수영	저	5,000원
99-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저	5,000원

99-12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김병로	저	7,000원
99-1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저	4,500원
99-14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국신	저	4,000원
99-15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재진	저	5,000원
99-16	전환기의 대북정책: 포용과 억지의 병행전략	홍관희	저	4,000원
99-17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박영호·박종철	공저	7,000원
99-18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조민	저	7,000원
99-1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와 추진 방안	박영규·이교덕	공저	5,500원
99-20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홍용표	저	4,000원
99-2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사상·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현준	저	5,000원
99-22	중국과 한반도 평화과정	최춘흠	저	4,000원
99-23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최수영·박영호·홍관희·허문영	공저	6,000원
99-2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신상진·여인곤·김국신·김영춘	공저	8,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99-07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V):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9,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8 (1999)	10,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기타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ku.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 이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인쇄/2000년 3월 25일

발행/2000년 3월 31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국제관계연구소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4

© 통일연구원, 200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ISBN 89-8479-003-6

8,000원